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2017. 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목적 ····· 1

Ⅱ. 감사기간(총 20일) ·····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6개 기관) ····· 2

Ⅳ. 감사실시 경과 ····· 3

1. 감사반 편성 ·····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 5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 7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 9

1. 산업통상자원부 ····· 9
2. 중소기업청 ····· 30
3. 특허청 ····· 39
4. 한국전력공사 ····· 41
5. 한국수력원자력 ····· 47
6. 발전 5개사 ····· 52
7. 한국가스공사 ····· 56
8. 한국석유공사 ····· 62
9. 한국지역난방공사 ····· 65

10. 대한석탄공사 ····· 66
11. 한국광물자원공사 ····· 67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69
13. 한국무역보험공사 ····· 72
14. 한국전기안전공사 ····· 76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77
16. 한국에너지공단 ····· 79
17. 한국전력거래소 ····· 80
18. 한국광해관리공단 ····· 81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83
20. 한국석유관리원 ····· 85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86
22. 한국산업단지공단 ····· 87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90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1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94
26. 한국디자인진흥원 ····· 96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97
28. 한국전력기술 ····· 98
29. 한국가스기술공사 ····· 99
30. 한전KDN ····· 100
31. 한전KPS ····· 101
32. 한전원자력연료 ····· 102
33. 기초전력연구원 ····· 102

34. 강원랜드 ····· 103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106
36. 전략물자관리원 ····· 106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06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07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108
40. 중소기업진흥공단 ····· 108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9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09
4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 109
44. 중소기업유통센터 ····· 110
4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11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12

1. 산업통상자원부 ····· 112
2. 중소기업청 ····· 129
3. 특허청 ····· 133
4. 한국전력공사 ····· 134
5. 한국수력원자력 ····· 136
6. 발전5개사 ····· 138
7. 한국가스공사 ····· 139
8. 한국석유공사 ····· 144
9. 한국지역난방공사 ····· 146

10. 대한석탄공사 ····· 147
11. 한국광물자원공사 ····· 148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49
13. 한국무역보험공사 ····· 151
14. 한국전기안전공사 ····· 154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155
16. 한국에너지공단 ····· 157
17. 한국전력거래소 ····· 158
18. 한국광해관리공단 ····· 159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60
20. 한국석유관리원 ····· 161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62
22. 한국산업단지공단 ····· 163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66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7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69
26. 한국디자인진흥원 ····· 171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172
28. 한국전력기술 ····· 173
29. 한국가스기술공사 ····· 174
30. 한전KDN ····· 175
31. 한전KPS ····· 175
32. 한전원자력연료 ····· 175
33. 기초전력연구원 ····· 175

34. 강원랜드 ····· 176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178
36. 전략물자관리원 ····· 178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78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79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181
40. 중소기업진흥공단 ····· 181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1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81
4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 181
44. 중소기업유통센터 ····· 182
4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82

Ⅶ. 특기사항 ····· 183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7. 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총 20일)

○ 2016년 9월 26일(월) ~ 10월 15일(토)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6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
중소기업청	한전KDN
특 허 청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기초전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서부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없음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table>
<tr><td>감
사
위
원</td><td colspan="2">◇ 위원장 : 장병완(국민의당)
◇ 위　원 : 이채익(새누리당)
곽대훈(　〃　)
김규환(　〃　)
김기선(　〃　)
김정훈(　〃　)
유기준(　〃　)
윤한홍(　〃　)
이철우(　〃　)
정우택(　〃　)
정운천(　〃　)
정유섭(　〃　)
최연혜(　〃　)
손금주(국민의당)
김수민(　〃　)
조배숙(　〃　)
◇ 위　원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
김경수(　〃　)
김병관(　〃　)
박재호(　〃　)
박　정(　〃　)
송기헌(　〃　)
어기구(　〃　)
우원식(　〃　)
유동수(　〃　)
이찬열(　〃　)
이　훈(　〃　)
김종훈(비 교 섭)
홍의락(　〃　)
(30인)</td></tr>
<tr><td>사
무
보
조
자</td><td>◇ 위원회 직원(17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이용준
- 입법조사관　김소정
-　〃　남궁인철
-　〃　임준기
-　〃　서재만
-　〃　황영준
-　〃　정종선
-　〃　서호진
-　〃　배승환
-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서정욱
-　〃　임주형
- 주무관　정진안
-　〃　최현숙
-　〃　이향우
-　〃　장윤명</td><td>◇ 의원보좌관(30인)
◇ 정책연구위원
- 새누리당 : 김영욱(4급상당),
박현정(4급상당)
- 더불어민주당 : 서미자(4급상당)
- 국민의당 : 김명진(1급상당)
◇ 속기주무관
- 오근순, 김희준, 권오정,
안상훈, 손정아, 지인영</td></tr>
</table>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26(월) 10:00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 · 무역)	국 회	
9/27(화) 10:00	산업통상자원부 Ⅱ (통상 · 에너지)	국 회	
9/28(수)	자료정리	-	
9/29(목) 10: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 회	
9/30(금) 09:00	<현장시찰> 한수원본사 및 월성원자력 본부, 경주 중앙시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찰	경 주	
10/4(화) 10:00	[자 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국 회	
10/5(수) 10:00	[전 력 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나 주	
10/6(목)	자료정리	-	
10/7(금) 09:00	<현장시찰> 1반 : 남동발전 영흥화력, 반월시화 스마트공장, 판교 테크노밸리 시찰 2반 : 석유공사 본사, 울산 석유비축기지, 동북아오일허브,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시찰	1반 : 수도권 2반 : 울산	
10/10(월) 10:00	[원 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 력 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 회	
10/11(화) 10:00	[무 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안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 회	
10/12(수)	자료정리	-	
10/13(목) 10:00	[R & D 및 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국 회	
10/14(금) 10:00	종합국감	국 회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191	
중소기업청	839	
특허청	718	
한국전력공사	681	
한국가스공사	527	
한국석유공사	518	
한국지역난방공사	398	
한국수력원자력(주)	555	
한국남동발전(주)	506	
한국중부발전(주)	493	
한국서부발전(주)	509	
한국남부발전(주)	481	
한국동서발전(주)	503	
대한석탄공사	497	
한국광물자원공사	4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0	
한국무역보험공사	451	
한국전기안전공사	481	
한국가스안전공사	473	
한국에너지공단	469	
한국전력거래소	520	
한국광해관리공단	49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07	
한국석유관리원	4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2	
한국산업단지공단	5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85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2	
한국디자인진흥원	424	
한국세라믹기술원	405	
한국전력기술(주)	370	
한국가스기술공사	451	
한전KDN(주)	430	
한전KPS(주)	450	
한전원자력연료(주)	424	
기초전력연구원	403	
㈜강원랜드	52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01	
전략물자관리원	40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1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5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333	
중소기업진흥공단	5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8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5	
창업진흥원	464	
한국벤처투자	470	
중소기업유통센터	534	
중소기업연구원	410	
한국발명진흥회	448	
한국특허정보원	4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8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85	
계	27,175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1) 증 인 : 38인(출석 37인, 불출석 1인)

구 분	증인	출석여부	직업·직위	신문·진술요지
9.26 산업통상자원부 I	김상현	출석	홈플러스 대표이사	동반성장지수 13, 15년 꼴찌, 14년만 양호 관련 시정조치 무시 후 불공정행위 일삼다 고발조치 갑질 논란 중심 관련
	이승철	출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무 대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조민수	출석	코스트코 대표이사	온오프라인 결제 시 특정카드로 한정문제
	김동규	출석	현대자동차 품질총괄전무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탈취, 기술 해외유출, 중소기업 보복
	이진성	출석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스타트업·창업 기업 간 용역 계약 관련 부당 행위 근절
	이재승	출석	현대자동차 직원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탈취, 기술 해외유출, 중소기업 보복
	한만채	출석	현대자동차 직원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탈취, 기술 해외유출, 중소기업 보복
	임영록	출석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문제 관련
	김종인	출석	롯데마트 대표이사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문제
	강찬석	출석	현대홈쇼핑 대표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문제
	안충영	출석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김용우	출석	한국산연 대표이사	외자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문제
	전인수	출석	E ink holdings Inc. 사장	기술먹튀 등 외자기업의 투자 및 고용문제
9.27 산업통상자원부 II	오인환	출석	포스코 부사장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김용환	출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종배 사무처장 대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전성 검증 관련
	변동언	출석	현대건설(주) 부사장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9.29 중기청 특허청	이병선	출석	다음카카오 부사장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
	김영태	출석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복합쇼핑몰 확장으로 중소상인 피해
	김창권	출석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전국 각지의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아울렛)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규모 및 상생방안에 대한 신문
	최승재	출석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제도의 문제점, 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강남훈	출석	홈앤쇼핑 대표이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 여부 홈앤쇼핑 운영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과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배청구 통보
	송재희	출석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홈앤쇼핑 운영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 관련
	정연희	출석	라인(네이버) 부사장	㈜모비아트에 대한 기술탈취 의혹
10.4 한국가스공사 등	성철경	출석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워터파크 설계발주와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낙찰자 방식 변경 과정
	이규래	출석	강원랜드 인사팀장	워터파크 설계발주와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낙찰자 방식 변경 과정
10.5 한국전력공사 등	위승용	출석	한전 영업운용팀 차장	한전모바일청구서 특허도용
	이병선	출석	카카오 부사장	한전모바일청구서 특허도용
	신찬식	출석	카카오 핀테크팀 부장	한전모바일청구서 특허도용
10.10 한국수력원자력 등	장순흥	출석	한동대학교 총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시 전문위원회 부실검토관련
	김명각	출석	농업	발전소 인근지역 미세먼지 피해관련
	이원석	출석	농업	송전선로 피해 관련
	성게용	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안전성 관련
10.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김강수	출석	㈜보광 이사	기술표준원의 독과점적 규격제도화 및 독과점 피해
	김경식	출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독과점적 규격 제도화 관련
	손태주	출석	㈜신진테크 대표	기술표준원의 독과점적 규격제도화 및 독과점 피해
10.14 종합국감	김영만	출석	㈜원주에너지 대표이사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수용성 허위조사 관련
	이승철	출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이한규	불출석	부천시 부시장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피해

(2) 참고인 : 12인(출석 10인, 불출석 2인)

구 분	참고인	출석여부	직업·직위	신문·진술요지
9.26 산업통상자원부 Ⅰ	김명수	출석	인천 부평깡시장 상인회장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강창범	출석	㈜오오엔육육닷컴 대표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 중소기업 피해 관련
	이상목	출석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	기술먹튀 등 외자기업의 투자 및 고용문제
	이수만	불출석	SM 대표이사	사드배치 관련 직격탄 - 한류 엔터테인 분야
9.27 산업통상자원부 Ⅱ	김홍현	출석	삼진공작	발전소 건립 공사 중 공사비의 증가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
9.29 중기청 특허청	인태연	출석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피해
10.4 한국가스공사 등	황재도	출석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장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안전업무 영역 경쟁도입의 문제점
	백명용	불출석	전 강원랜드 상무	워터파크 설계발주와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낙찰자 방식 변경 과정
10.5 한국전력공사 등	김영민	출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월성원자력지회	한전 KPS도급 관련
10.10 한국수력원자력 등	김석진	출석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조합 분회장	국가기관시설 경비 노동자 문제
10.14 종합국감	김영무	출석	선주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해운 법정관리시의 손실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에 지속적 경고
	황우찬	출석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대책 관련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획조정	○ 비영리법인 관련 - 산업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1,000 여개 중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법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해산 등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한국에너지재단의 경우에는 기부금(또는 출연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용역근로자 처우개선과 부당한 과업지시서 등의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므로, 전수조사 등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필요 ○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노사합의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 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지역 공공기관 간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산하기관의 비위 적발자가 5년간 500명이 넘는 상황이므로, 사전적인 감독 강화가 필요 ○ 민간근무휴직 시 대기업 취직보다는 중소기업 파견을 통한 현장 경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 복귀 후 민간 대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 ○ 공공기관 자산매각 관련 -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영이 부실하거나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회사가 5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 회사 등의 매각, 기능조정 등 부실회사의 정상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등에서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고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임원 공모 관련 자료들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 필요 ○ 장차관실 기타운영비와 관련하여 임의적 지출이 아닌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에 의한 지출방안이 마련될 필요 ○ 각종 위원회의 조사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기준 없이 제각각 집행되고 있으므로 각급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정책	○ 한진해운 관련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손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분석자료가 없는 등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문제 지적 ○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 조선업 통폐합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문제가 되는 분야는 해양플랜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조선사들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난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업구조조정 관련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3,000개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도 법정관리로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업,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 창출 방안을 산업부 차원에서 선제적·주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문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의 이월·불용이 많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및 채권확보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30대 대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노동배제적인 산업정책에서 노동을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 스마트공장 보급 수준이 SCM, ERP 등 기초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수출로는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산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의 집행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지역 균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점검할 필요 ○신산업 창출, 특히 스타트업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혁신도시 관련 지역 산학연 클로스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전경련 등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NEET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산업 현장에 대한 연계성이 강한 산업부에서 고용연계 교육 정책에 보다 관여할 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년 연속 정관 규정을 어기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운영비 예산을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LNG선박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가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 ○기술유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제화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환수절차 필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 적발시스템 강화, 3회 이상의 부정사용의 경우 국가R&D 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연구비 환수금의 환수율 제고를 위해 환수기간을 단축하고,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환수절차 개선이 필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R&D전략기획단 관련 - R&D전략기획단이 출범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 - 전략기획단의 설립근거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 ○R&D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지 필요 ○산업기술 관련 기관들의 통·폐합 검토 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전략물자관련 과제를 관리할 필요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필요 ○R&D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R&D 사업화 전담은행의 협약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필요 ○ 혁신도약형 R&D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에 세제지원 혜택 부여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청년층의 미국 닭공장 이민, 고학력 유학생의 미국 잔류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산업기반	○ 소형 민수·무장헬기 개발사업이 해외 노후 기종을 떠맡고 핵심 기술도 이전받지 못하는 등 실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조선산업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 산업부 산하 위원회가 업주 대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업주 단체들의 컨설팅 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구조조정 정책 등에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 ○ 탄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를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필요 ○ 뿌리산업 진흥 2차 계획의 제대로 된 수립 필요 ○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을 의장으로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 ○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석유화학단지의 내진설계 완비여부 및 지하배관의 안전성에 대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무역투자	○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진해운사태・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출여건도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북한이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위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기획, 설계 등 총체적 개념이 포함된 Korea Made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략물자와 관련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수출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유출 후 노동자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철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유사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대형유통매장 설립을 위한 외투법인 설립에 페이퍼컴퍼니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할 필요 ○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NCP(National Contact Point)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점검할 필요 ○ 유턴기업 유치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원제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무역상대국의 상계관세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동향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부진하고, 외투유치도 미미한 상황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경제자유구역이 유사특구와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며,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제특구에 대한 활성화 및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잠진-용유도 지역의 연도교 건설이 경제자유구역 내 잠진-무의도 연도교 건설과 연계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 ○ 이란 K-Tower 프로젝트 관련 미르재단 관여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 및 준비과정 미흡 문제 제기 ○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또는 특수 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며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할인과 함께 행사기간 중 백화점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생물작용제 취급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식물병원균으로 분류되는 벼흰잎마름병원균과 도열병균의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요 원료물질의 인수량 등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음.
기술표준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콜 대상 제품이 여전히 유통매장과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바, 리콜조치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이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폐업한 경우 표준원이 리콜제품을 직접 수거하고 리콜제품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KS인증 제품의 시판품조사 대상이 시공물인 경우, 필요시 기존의 샘플링조사 대신 시공물 자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 표준을 개정할 것 ○최근 LED 제품의 리콜명령에 따른 회수율이 42.3%에 불과하고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LED 제품의 인증단계부터 리콜이행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갤럭시 노트7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을 검토할 것 ○ 차선 도색용 유리알에 대한 KS 표준이 특정업체의 품질관리 기준과 유사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표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 ○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14.8)'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향후 부처간 제품안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통 상	○ 미국의 냉연·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응 관련, - 이후 이어질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WTO 제소 등 대응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에 대해서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것 ○ 중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긴 처리기간, 투명성 결여, 시험성적서 불인정 등 여러 비관세장벽에 기업차원의 대응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 ○ 한·칠레FTA 재협상에서 그동안 양허 예외,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해 왔던 400여개 칠레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논의대상인데,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 ○ 미국과 인도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무역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너지 (자원개발· 공급)	○ 석유 비축·유통질서 관련 - 한국석유공사의 울산부이(BUOY)이설 공사에서 부이를 신규 구매하려는 계획을 개보수로 전환하였는데, S-OIL과 같은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 지위승계를 이용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의 중복적발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3년간 50건에 달하고, 440여 업소 중 320개 업소가 의무구매 물량(50%)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알뜰주유소 중 안심주유소 가입현황도 낮아 관리가 미흡하며, 국내 기름값 인하효과도 미미함 - 유가인하를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이용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왔으나, 여전히 장외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만 전자상으로 하는 협의매매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 -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 시급함 ○ 도시가스 공급 요금 관련 - 일부 시·도는 지역난방 보급확대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완화하였으나,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검침비는 인하되지 않았으므로 시도별로 상세히 점검하여 이를 요금인하에 반영할 필요 -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급계획의 목표 수요전력과 기저발전 건설계획 등의 오차를 줄여 가스수급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스 안전 관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배관 내진설계율이 45%로 미흡하고 서울지역이 특히 취약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올해 전통시장 가스시설 일제점검 결과 6,709개 업소 중 2,269개 점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내용도 누출기 차단 이상, 환기불량, 중간밸브 미설치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성과가 2015년 감사원의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자구노력은 부족한 수준으로, 빚내서 빚을 갚는 폭탄넘기기가 지속되고 있어 해법을 제시할 필요 - 에너지 가격이 낮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할 필요 -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을 에너지공기업에만 맡겨두어 소극적 대처와 자구책 마련에 급급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처 차원의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필요 -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최근 발생한 자원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및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등이므로,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주요사업인 하베스트, 다나, 암바토비, 볼레오, 홋고르 사업에서 약 11조 3,000억원의 투자 이후 9조 1,000억원의 자산손상이 있었고 자산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편성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정부의 회생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 - 폐지된 성공불 융자와 유사한 특별융자예산의 편성을 심사숙고할 필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할 필요 ○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 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예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이 평균 3.8%로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으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 - 최대전력에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및자가발전기와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포함시키고 있어 최대부하가 얼마인지 불확실하고, 계통의 부하와 발전기의 출력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비의 과잉공급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부하 발표 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제외하고 별도로 발표할 필요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제2항에서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할 필요 ○ 폐광지역 육성 관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한 수준으므로, 폐광기금에 대한 사후점검·성과평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금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폐특법 효력이 만료되는 2025년까지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폐광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상향할 필요 ○ 재제조산업을 활성화하면 에너지 자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매출액 대비 고용창출효과도 높으므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020년까지 석탄·연탄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연탄가격이 인상되었으므로,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에너지 (전력·원자력)	○ 전기요금 원가 관련 -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 원가연동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총괄원가와 종별원가를 검증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총괄원가 대비 회수율이 과도하므로 매년 사전에 총괄원가를 검증하고 차년도 요금에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정확한 종별원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 주택용 전기 사용량 총합보다 전력 다소비 기업 15개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더 많고, 전력 다소비 기업 10개사의 사내유보금이 320조에 달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필요 - 전기요금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시 반영 필요 -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시적 완화조치를 시행한 것은 부적절 - 전기요금 누진제의 수준을 현재 3단계/누진율 2.3배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요금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금제와 다른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연체료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한전이 과거의 적자를 복구하고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조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심야용 전기요금이 최초에 비해 157% 인상되었으므로 완화 필요 ○ 전력거래소에서 예측한 전력량에 비해 실제 발전한 전력량이 적을 때 지급하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력 수요 예측을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 ○ 분산형 전원 확산, 소규모 전원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현재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들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매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2015년부터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 ○ 원전 내진성능 강화 관련 - 원전 기계 중 내진 검증이 필요한 기계 제조사들의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내진성능 보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한울 1·2호기의 경우 아예 내진검증문서가 없으므로 적합한 조치 필요 - 신고리 5·6호기 부지 근방 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상반되어 논란이 있는데, 논란이 있다면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충분한 지질조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를 거친 후에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보다 적절 - 월성 1호기가 이미 설계수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호기들에 비해 지반이 연약해 지진에 더 취약하므로 폐로 검토 필요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원전개선대책 중 7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진성능기준·원자력 안전조치 기준 미달로 인한 과징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 및 관련 기준 준수 필요 -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하고 관련지침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 -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에 민간검증단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고리 원전 10호기가 한꺼번에 정지할 경우, 산업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달리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수호기 전력계통 안전성검사를 우선 실시할 필요 ○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원전 해체 충당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수원이 제출한 사건·사고 관련 보고자료 중 사실관계의 연도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부실하여 은폐 의혹이 있음. ○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자가발전기처럼 실제 계통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중앙급전 발전기의 용량을 제외할 필요 ○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여 전력피크 기간에는 계획예방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력예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과다한 전력수요예측을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수립하였으므로, 이러한 과다한 전력수요예측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 작업반 구성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체 R&D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R&D의 비중을 원자력·화력 발전 관련 R&D의 비중보다 높일 필요 ○ 원자력 홍보예산이 전기안전·전기절약 홍보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필요 ○ 현재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전력기금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할 필요 ○ 전력기금이 아닌 한전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 전력기금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 발전 5개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힘없는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산업부 자체 감사 등의 조치 필요 ○ 원료구매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5개사들이 맺은 유연탄 공동구매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 발전 5개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단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발전 5개사가 필요 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영비효율 해소를 위해 발전 5개사를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발전소에서 바다에 배출하는 소포제나 냉각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필요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포천 지역에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 사용 후 제품을 분해한 후 세척·검사·보수의 단계를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재제조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법에서 정한대로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할 필요 ○ 공공기관·관공서 등의 전기차 운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충전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학교 위를 지나가는 송전선로는 전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중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 많은 국비가 투입된 1,000Mw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고, 향후 국가 R&D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필요 ○ 비발전 정산금을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 개선 필요 ○ 비중앙급전발전기를 EM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전 가구에 AMI를 조속히 보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효율적인 기능조정 필요 ○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SRF 등 폐기물 연료는 LNG에 비해 발전 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등 친환경 연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 ○ 풍력발전기 전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 2022년까지 1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012년에 제시한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목표를 완화하였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달성 목표를 2012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드펠릿 혼소 방식을 지양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대할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 폐목재에는 RE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건설 폐목재를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이 연간 280억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REC를 적용하지 않는 폐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관련 -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이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투자이익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지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소규모 분산 전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 - 장기융자, 고정수익 보장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농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태양광 발전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적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고효율 인센티브 사업 관련 - 정부가 7월 실시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제품 출시 당시에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강화된 현행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제품 출시 당시보다 강화된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대기업 제품의 소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전력 정책으로 인해 2015년 기준으로 집단에너지 민간사업자 35개 중 23개가 적자이며, 사업자가 발전소를 판매하려고 하더라도 매각 가능성도 낮아 지역주민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크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을 통해 열요금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나, 민간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에너지 이용에 있어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 ○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의혹 제기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자금 지원 중심에서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혁신기업의 창업지원, 근로자 역량강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 ○ 대기업 한식 뷔페의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여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적합업종제도 개선 -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생계형 중소자영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 ○ 대기업 집단기준 상향 관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내수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중소기업청의 노력 필요 - 투자 활성화를 사유로 대기업 집단기준 상향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대기업 집단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허용범위와 상충되는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 ○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사업에 특정 대기업의 사업 참여 편중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소상공인 지원	○ 시청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방송의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 - 획기적인 시청률 제고, 공영방송과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업조정 시 대부분 자율합의로 끝나고 있으나, 자율합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백화점 출장세일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어묵, 양말, 등산의류, 수산물 등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품을 판매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 - 출장세일이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겹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파악 필요 ○ 지역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례를 감안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실질적인 상권 중심으로 상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수원 복합쇼핑몰 입점이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원 확대 -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 상승, 고용 증가 등 지원효과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확대에 노력할 필요 - 지역 소공인들에게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확대 필요 ○ 소상공인 범위기준을 근로자수로 구분함에 따라 고소득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으로 포함되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 ○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간접대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전환하고, 맞춤형 대출상품개발 필요 ○ 지난 3년간 2400개의 나들가게가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반면, 신규지정은 1000개 수준으로 나들가게사업 운영 개선 필요 ○ 나들가게 영업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 개선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잘 융합 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 필요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참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전통시장 지원	○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고, 구매 촉진을 위한 상품권 판매처 확대 필요 - 구매제한액 완화, 공공·기업부문의 상품권 구매 확대 등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노력 필요 ○ 공공기관 등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필요 ○ 2017년 종료되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후 지원 연장 방안 검토 필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분담비율 축소방안 검토 필요 ○ 전통시장 화재 관련 불량시설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중견기업 육성	○ 월드클래스 300 사업 운영 개선 - 동 사업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기업 선정 시 지역 및 업종 편중 문제 해소 필요 -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R&D, 해외마케팅 지원 배제 등 제도 개선 필요 ○ 재창업자금 부실률 완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재창업 준비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재도전패키지 선정기업 수도권 편중 문제 개선 필요
벤처·창업 지원	○ 융자·보증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필요 ○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벤처캐피탈 위탁운용사의 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 검토 필요 ○ 창투사 심사역에 친인척이 관계되어 비상장 주식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 방지 필요 ○ 클라우드펀딩 한도 폐지를 위해 주관부처인 금융위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회와 적극 협의할 필요 ○ 대출보다 투자를 통한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창업생태계 기반이 없는 창업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창업기초를 건실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기업가 정신 의무화 교육 필요 - 융자보다는 투자를 통한 엔젤투자자 육성 정책 강화 필요 - 회생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변경하는 등 재도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창업인턴제를 통한 지원대상 인턴의 퇴사, 창업인턴제 예산 집행 저조 및 인턴 참여자의 사업화 지원 저조 등 창업인턴사업 부실화 문제 개선 필요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발급 시 학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력제한 제도 개선 필요 ○ TIPS 프로그램 지원업체 선정 기준을 2016년 4월 이후 65점 이하로 낮춘 것은 창조경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 변경이므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창업선도대학 전담인력 중 계약직 비율이 높아 전문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필요 ○ 정부의 각종 창업정책의 중복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판로 및 수출 지원	○ 행복한 백화점 운영 개선 필요 -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제품이 입점하여, 이들 제품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크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 지적 - 입점 수수료 차별화, 매장 위치 또는 제품전시 재배치 등 중소기업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대행사업 개선 필요 - 중소기업이 홈쇼핑사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 지적 - 중소기업이 0.9%~3% 수준의 수수료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납부하는 문제 개선 필요 ○ 공영홈쇼핑 운영 개선 - 낮은 판매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이후 자본금 잠식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문제 발생 우려되므로 대책 필요 - 공영홈쇼핑 승인 조건에 주주사들이 공용홈쇼핑 방송 편성에 관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에서 방송 편성에 개입하고, 대주주 3개사가 공공밴더로 벤더사 물품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 - 공영홈쇼핑 승인 조건 중 상품편성과 관련, 상품편성위원회 등을 통해 모든 구성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용홈쇼핑 벤더수수료율(3%) 인하 검토, 익익월 3일까지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결제일 문제 등을 지적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이 공영홈쇼핑으로 이직시 평균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연봉 상승률이 33%가 되는 등 공영홈쇼핑 직원채용 문제를 지적 ○ 홈앤쇼핑 운영 개선 - 높은 판매수수료,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중 감소, 황금시간대에 수입제품 방송 등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 판매수수료를 공영홈쇼핑 수준으로 인하, 황금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을 확대, 대기업 또는 수입제품 판매 이익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 25% 이상 유지 등 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농협,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홈앤쇼핑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관련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이나 수의계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건 개선 - 중소기업 직접생산 위반 적발이 대부분 내부신고자에 의한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검증 능력을 제고할 필요 -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회전 추천, 셀프 추천의 문제가 발생 ○ 지역농협이 간주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
금융 및 인력 지원	○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을 자금안정성 보다는 기술사업성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기준 개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 대출의 경우 기술평가등급을 담보 유무에 따라 대출기준을 2단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문제 지적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확인 필요 - 사업 성과지표를 취업률에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전북 지역의 특성화고의 사업 참여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리 내실화 필요
기술 지원	○ 중소기업 R&D는 전체 국가 R&D의 3.8% 수준이므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 - 중소기업 R&D 지원의 지역편차 문제 개선 필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이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기업, 공공기관의 구매 약속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특허출원이나 사업화 성과가 높은 창업 초기 기업(5년 미만)에 대한 R&D 지원 강화 필요 ○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장비 활용률 저조 지적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 - 중소기업청이 특허청과 협업을 하여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R&D 환수 대상액 증가에 따른 철저한 사전 예비심사 강화와 사후 환수율 제고 필요 ○ 중소기업청 소관 R&D 자금 유용에 대해 관리감독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필요 ○ R&D 성공률 대비 낮은 사업화 성공률 제고 필요
기타	○ 지원업체 대표와 해외여행 등 중소기업청 내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 ○ 중기업과 소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소기업을 담당하는 국 또는 과를 신설할 필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3. 특허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심사·심판 정책	○ 국가 간 특허심사 경쟁시대에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조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의 독립기관화 등을 통한 인사상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필요 ○ 새로운 증거제출로 인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뒤집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추진 필요 ○ 국제디자인 출원제도의 활용 활성화 필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DESK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 당국 및 타 부처와 협력 필요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온라인 특허표시 의무화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특허지원창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력 지원 확대 필요 ○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 활성화 필요 ○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ID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필요 ○ 특허의 피인용 횟수 산출 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연구·분석을 위한 근거법률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정부 R&D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우수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변리사 제도	○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와 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필요 ○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청 경력자의 시험과목 선택에 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필요
기타	○ 산하기관과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산하기관 채용비리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처리한 내용 개선 필요 ○ 특허정보진흥센터 임원의 경력 무관자 채용 문제 조치 필요 ○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동 사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던 업체에게 유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 필요 ○ 특허청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가 58개에 이르고 유사·중복이 다수 있으므로 시정 필요 ○ 지식재산 포인트제도 시행 이전에 무상 개방한 특허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대기업 등이 포인트를 지급받지 않도록 개선 필요

4. 한국전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요금 및 판매	○ 원가 관리 관련 - 한전이 원가절감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 -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총괄원가 대비 회수율이 과도하므로 매년 사전에 총괄원가를 검증하고 차년도 요금에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총괄원가와 종별원가를 검증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원가연동제(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 전기 요금 체계 관련 - 유럽과 달리 전기요금에 세금, PSC(정책지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결코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음. -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필요 - 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미곡처리장에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종별 요금제의 일부로 공공요금 종별 신설 필요 -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연장 필요 ○ 전기 판매방식 관련 -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 - 전기요금 정산제도 도입 필요 - 검침회사와 계약할 때 물가상승율과 건설노무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현장검침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조정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전의 전기요금 계산방식에 착오가 있어 부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필요 - 자동이체할인제도(전기요금 1% 할인)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필요 - 전기요금이 특정 액수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안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안전관리	○ 안전업무 관련 기본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정규직에 비해 도급직원들의 산재발생률이 현저히 높으므로 도급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변전소 850여개 지진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15개밖에 없으므로 추가 설치 필요 ○ 단 1회밖에 실시하지 않은 현장지진훈련 확대 필요 ○ 활선공법에 따른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선공법 사용 자제 필요 ○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서 배전공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묻고 있는데, 이는 협력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므로 시정 필요
송전선로	○ 지중화 관련 -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국가나 한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지중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당진 관련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있는 당진에 앞으로 100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여개의 송전탑을 추가 건설할 예정인데, 최소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 -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당진 같은 지역들을 위해 전력기금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 - 당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 검토 필요 ○ 기타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시행령에 문화체험행사, 관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 송전탑을 줄이기 위해 고압직류송전시스템을 국가전력망으로 편입할 필요
입찰 체계	○ 담합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입찰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물품 계약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아서(평균 94.75%)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 ○ 보안이 취약한 자체 조달시스템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라장터를 활용할 필요
기타	○ 직원 안보교육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북의 대남공작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등의 내용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전 점검 필요 ○ 한전이 과거의 적자를 복구하고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조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백령도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문제가 심각하므로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통신사와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전봇대에 무단으로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2009년에 수립한 AMI 보급계획 대비 실제 보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므로 보급 실적 제고를 위해 PLC칩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보완 필요 ○ 한전과 자회사들의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접속 횟수가 2010년보다 대폭 증가한 반면에 한전의 인프라가 그 증가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 한전이 제공하는 모바일 전기료납부 서비스가 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음. ○ 직접구매제도가 2003년에 도입되었으나 구매자에게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한건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한전이 외국 회사와 2011년에 합작 설립한 법인 켑코우데의 수익이 전혀 없어 휴면법인을 추진하면서도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임원들에게 고가의 연봉과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ESS 활용촉진을 위한 전기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015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0.34%)이 미래부의 권고안(2%)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제고 필요 ○ 연구개발 예산으로 집행한 연구과제의 실용화율 제고 필요 ○ 전산입찰비리사건에 연루된 공사업체의 불법 낙찰 실적이 지금도 계속 인정되고 있으므로 시정 필요 ○ 자회사 중 18개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통연계비중 확대를 위해 발전소와 변전소 전력설비 투자를 확대할 필요 ○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17년 이후 자가망구축사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존 통신대기업의 이윤보장 목적 외에 통신망 구축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전량 매각 필요 ○ 학교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실제 학교에 미치는 전기요금 지원효과가 미비하므로 개선 필요 ○ 최근 한전 약관 개정으로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여 신재생사업 확대에 지장이 있으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지원 확대 필요 ○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므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준은 완화할 필요 ○ 전문성 있는 운용사가 에너지신산업 펀드를 운용할 필요 ○ 발전사업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정산조정계수를 정하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필요 ○ AMI를 전 가구에 보급하게 되면 현재 3,000여명에 달하는 검침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므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01년에 국무총리가 폐지를 지시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제도를 작년까지 운영한 것은 부적절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민영화는 부적절 ○ 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한거리 등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한전의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규정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할 필요 ○ 사회봉사 감경제도 폐지를 계기로 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의 도덕적 가치를 더욱 바로 세워나갈 것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전의 안전성	○ 지진 대책 관련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 당시에는 양산활성단층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 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부지 근방 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상반되어 논란이 있으므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 - 원전의 내진 강도를 7.5 이상으로 높일 필요 - 한수원 차원에서 원전 주변지역 최대 지진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 -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검토 필요 - 소방방재청이 수행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용역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한수원이 공청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수원 지진계측값과 KINS의 지진계측값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므로 개선 필요 -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용역 중 지도의 최대지진규모와 표의 지진규모가 전혀 달라 최대지진규모값이 축소된 의혹이 있음. - 경주 지진 발생 시 원자로계측값을 기준으로 하여 월성 1호기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자유장계측값이 원자로계측값보다 20~30% 높은 점을 감안하면 즉시 정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음. - 월성 1호기가 이미 설계수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호기들에 비해 지반이 연약해 지진에 더 취약하므로 폐로 검토 필요 - 원전 중 13기의 경우 내진검증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데, 무엇을 근거로 내진검사를 해왔는지 의문. 원자력 발전소 내진 검증시스템 점검 필요 ○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하고 관련지침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 -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이 아직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 -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 2호기 자료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은 부적절 ○ 안전체계 관련 - 안전업무 관련 기본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재난대응매뉴얼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필요 - 북한이 개발한 새로운 미사일 공격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채용 등 대비책 마련 필요 - 한수원이 제출한 사건·사고 관련 보고자료 중 사실관계의 연도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부실하여 은폐 의혹이 있음. - 한빛 4호기의 방사성관리구역 내부를 용역직원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 원전의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
비정규직·위탁 업체 처우 개선	○ 한수원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고용을 줄일 필요 ○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급여나 복지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가 위탁업체에서 발생했고, 부상사고도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발생했음. 위탁업체 안전관리 강화 필요
기타	○ 위조로 의심되는 수입부품들 중 대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전의 부품과 품질 전반의 대대적인 재검수를 실시하고 허위로 파악된 핵심 부품들의 교체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 ○ 원전에 출입하고 있는 주둔 군장병 전원에 대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 실시 필요 ○ 발전소 내 이동도 금지되어 있는 손상 사용후핵연료를 육로로 대전까지 이송한 사례들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후핵연료가 제 위치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 ○ 발전소에서 바다에 배출하는 소포제나 냉각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필요 ○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보고서가 정치인들의 반핵·탈핵 주장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규정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감사원 감사 필요 ○ 숭례문 화재로 문제가 됐던 불량 불꽃 감지기와 불량 고압가스실린더를 납품했다가 적발된 엔케이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 GE사가 납품한 밸브 플러그가 부적절한 소재를 썼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되면서 한수원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서 때문에 GE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공정한 면책 요구에 반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 ○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재추진 필요 ○ 원전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들,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단독공급업체라는 등의 이유로 이들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을 실효성있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방사성 폐기물의 양, 원자로 유형 등에 따라 폐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발전소별로 폐로비용을 책정할 필요 ○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료와 함께 출장료도 받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비서실 차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프랑스로 파견보내는 등 부적절한 점들이 많았으므로 재발 방지 필요 ○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고성능 밀폐형 방수문 설치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 ○ 신고리를 제외한 발전기 정비 인력 중 5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70%에 가까우므로 숙련정비인력의 충원 필요 ○ R&D 예산 중 원전해체기술 관련 예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자료유통시스템 도입을 시급하게 마무리할 필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술력 확충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1개 댐의 안전확인계측기 중 48%가 고장난 상태이므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노후계측기 교체 필요 ○ 고창 곰소만의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였는데, 한빛원전에서 나온 온배수의 영향일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수력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필요 ○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비중 확대 필요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의 거리 확대 필요 ○ 비상대응계획 중 30km 비상계획구역 바깥 완전 소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축소 필요 ○ 원자력과 관계없는 통일교육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알림장을 배포한 것은 부적절

6. 발전 5개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발전5개사 공통	○ 원가·단가 관련 - 총괄원가 대비 회수율이 과도하므로 매년 사전에 총괄원가를 검증하고 차년도 요금에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총괄원가와 종별원가를 검증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할 때, 재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는 오히려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폭증했으므로 연료비와 단가를 연동시킬 필요 - 재료비를 제외한 원가가 2011년보다 50% 상승한 것은 원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철저한 원가관리 필요 - 재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외 비용을 증가하여 제조원가를 증가시킨 것은 부적절 -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환경오염 관련 -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기환경오염, 암환자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지양할 필요 - LNG 발전소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자체 공급보다 외부 구매를 통해 RPS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외화가 유출되는 우드팰릿이 아닌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관련 - 발전 5개사들이 위험한 일들을 외주업체에 맡겨 외주업체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가 위탁업체에서 발생했고, 부상사고도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발생했음. 위탁업체 안전관리 강화 필요 - 2014년 이후 준공한 발전소들은 지진 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수립 필요 ○ 기타 - 원료구매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5개사들이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협약'을 체결했지만, 2015년 공동구매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함. 수급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사간 공조를 통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서 준수 노력 필요 - 연료 공동구매를 위한 통합구매지침을 만들 필요 -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5개사들의 일부 통합을 검토할 필요 - 발전소에서 바다에 배출하는 소포제나 냉각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필요 - 발전소 철거 시 공사와 고철매각을 일괄 발주하는 방치매각 방식을 택하는 것은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므로 시정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비용을 확대할 필요 -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발전소 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징계위원회 외부위촉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할 것 - 경상정비 사업비가 최근 대폭 증가한 것은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므로 수의계약 비중 축소 필요
남동발전	○ 유연탄 화력장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를 더 높일 필요
중부발전	○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정도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측정 필요 ○ 자회사인 상공에너지의 당기순손실이 커지고 부채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
서부발전	○ 발전연료운반선박을 운행할 때 보다 많은 국적선을 사용할 필요 ○ 유연탄에 비해 LNG의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부적절
남부발전	○ 지역에 따라 경비용역의 임금이 다른 문제점 해결 필요. 경비용역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 필요 ○ 특수경비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으므로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로 개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동서발전	○ 1,000MW 화력발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그 증액된 공사비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서발전이 중재할 필요 ○ 특별한 이유 없이 1,000MW 화력발전 공사의 핵심 부품을 일본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동일한 주제에 관한 용역을 동시에 중복되게 발주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 ○ 미쓰비시가 울산복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할 때 실제보다 낮은 수준의 제품의 실적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해 국가적 피해를 막을 필요 ○ 감사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예비후보활동을 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 방지 필요 ○ 당진발전소에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송을 실효성있게 진행할 필요 ○ 주요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당진에 좀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할 필요

7. 한국가스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자원 개발	○ 해외자원개발 3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산자위 차원의 대책 필요 ○ GLNG사업은 투자비가 1,000억원 증가하는 등 사업전망이 악화되는 등 관리역량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아카스 사업을 위해 구매한 기자재를 사업중단으로 대체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자재가 손상되는 등 보관상태가 나빠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 ○ 41개 해외 출자회사 중 2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17개는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해외투자사업 평가결과 C, D 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 이라크 바드라사업의 경우 유가하락과 관계없이 생산량, 내부수익률 등이 당초보다 하락하고 생산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이라크 정부와 재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할 것 ○ 우리 도시가스 인프라가 포화상태이고 해외 중하류 인프라 구축은 유망한 상황이므로 적극 진출할 필요 ○ 우즈벡 CNG, 실린더 사업은 순이익 미실현, 낮은 배당전망에도 자산평가 B군으로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사업성이 높음에도 유동화대상이 아닌 매각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일관되지 않으므로 평가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길 필요
천연가스 도입 및 안정적	○ 가스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공 통합 천연가스수급협의회 등을 만들어 수요예측 정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공급	○ 민간 직수입자는 과거 가격이 낮으면 직수입하고 가격이 높으면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등 수급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서 민간 직수입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 ○ 가스수급계획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야 하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발전용 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으나 분산형 전원 등 LNG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전력수급계획에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 LNG 운반선 4년간 용선비용이 건조비용과 같은데 용선만 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을 분석하여 직접 건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적선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우리 조선사에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 ○ 가스공사가 국제시장의 Buying Power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제5인수기지 건설시 국제적 트레이딩을 위한 동북아 LNG허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추진이행 각서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가스배관 설비 준공 후 도시가스사의 공급시설 미비로 설비가 유휴화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히 해결할 필요
도시가스 요금 및 보급 개선	○ 천연가스보급 여부를 공사의 경제성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원 및 전라도 등 천연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노력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산업용 대기업 수요자는 싼 가격에 공급받고 가격 상승 시 대체연료로 전환하여 원료비 미수금은 일반국민에게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대기업은 반복적으로 가스냉방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
경영관리	○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2013년, 2014년 연속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데 이어 D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관장이 뇌물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이므로 신뢰도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성과연봉제 도입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구성원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저성과자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 협의할 것 ○ 낮은 경영평가와 투자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봉이 급격히 인상되어 공기업 중 직원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임 ○ 5기지 입지선정 용역을 2012년 7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약 3억1천3백만원을 지출하여 완료하고, 똑같은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금 4억9천만원으로 중복 진행한 것은 문제임 ○ 인천 LNG 저장탱크 3기 건설시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움을 체결하였는데,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필요물품 공급에 소상공인도 참여하도록 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가스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기존 연봉의 2배 수준을 받은 사례, 약 36억원의 도시가스 요금 부당감면 사례 대책을 마련할 것 ○주재지 소득세가 국내 수준을 초과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대상이 아닌 아카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특혜가 과도하므로 시정할 것 ○인천기지본부 수입 LNG 수입세 미납 및 삼척기지 건설단 공유수면매립지의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로 인한 약 60억원의 가산세 납부 사례는 기강해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주배관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 관련 총 39건의 담합으로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담합한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이들이 다시 입찰에 응하고 있으므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퇴직자 단체인 사우회가 만든 청우인텍과 수의계약이나 형식적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시정할 것 ○사장 취임이후 신윤리경영을 선포하였음에도 가산세 문제,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 ○서울동부지사 이전하면서 노원구 유휴공간을 가스홍보관으로 건설 중이나 당초 가스안전체험관 계획과 달리 대기업 가스기기 전시관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공기업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필요 ○홍보비로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 현장 지원을 2회 실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하였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향후 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가 필요 ○ 외국제조사와의 에이전시 계약서를 위조하여 형사고소된 월드하이테크사가 부정당업체 지정 이후에도 제재 효력 정시신청을 하여 사업 중인데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처할 것
안전관리 및 기타	○ 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라 두고 있는 지진계측계의 내용연한이 초과하였고 경주지진 발생시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고, 수치 상승에 따른 대처도 안일하였음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나 도시가스사업자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가스공사 생산기지만 수립하고 있고 본사와 정압관리소는 수립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립여부를 확인할 것 ○ 2015년 감사원 감사로 예선 계약기간을 단기화하고 계약을 공개하며 적정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타 지역 예선업체가 참여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 ○ 가스공사는 재난대비 비상발전을 디젤발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가동가능기간이 3일이 채 안되므로, BOG(증발가스) 이용방안 등의 대책을 모색할 필요 ○ 용접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는 피폭사례가 있고 방사선 투과량을 낮추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후에는 작업시간만 2배로 늘어나고 방사선 피폭 저감 효과가 미흡하므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안한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가스공사의 에너지 복지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

8. 한국석유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자원 개발	○ 해외자원개발 3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산자위 차원의 대책 필요 ○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부채비율이 지난해 453%에서 올해 630%로 예상되고, 저유가 상황 지속시 2020년 1,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미흡하였음 ○ 주요 사업인 다나는 2018년 흑자전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하베스트는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가투자를 예정하고 있어 진퇴양난임 ○ 에너지 가격이 낮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할 필요 ○ 주력사업인 하베스트나 다나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의 증자를 가정하더라도 부채비율이 4,00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므로, 5조원 이상의 증자가 조속히 필요함 ○ 석유공사를 포함해 모집 펀드 금액 중의 80% 이상 약 3,000억원을 공공기관이 모집해 만든 트로이카 펀드는 현재 누적손실율이 88%에 이르러 석유공사는 527억 투자액 중 450억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음 ○ 석유공사가 자산을 4단계로 구분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으나, 공사에만 맡기면 예상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국회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필요 ○ 하베스트는 청산시 1조2천억원 이상의 비용과 운영시 2020년까지 1조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어, 자산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세부재평가를 거쳐 정부출자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다시 국회와 협의할 필요 ○ 잠빌광구의 경우 탐사를 위해 별도 시추선을 건조하고 건조비용을 타 광구 용선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활용이 저조하고 매각도 되지 않은 채 유지비용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유가 시기에 무리하게 자산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고유가 시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것 ○ 원전과 연계된 UAE E&P 사업에서 석유공사가 3년간 저장료만 3,400만 달러 부담하고 대형유전 생산참여 등 반대급부는 GS가 가져간 것은 문제임 ○ 해외 자회사의 누적 투자액 대비 누적 회수액이 2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자회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
석유 비축 동북아오일허브	○ 비축시설의 내진성능 검토를 설계도면 평가로 대체하거나 평가 주기가 긴 상황이므로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되어 안전이 우려되고 과도한 시설유지비가 발생하는 석유비축시설의 교체를 검토할 것 ○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필요 ○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저장시설 규모에 비해 최근 KPMG를 통해 실시한 용역결과 필요규모는 축소되었는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동북아 오일허브에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알뜰주유소 운영	○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약 36원은 외곽에 소재하여 임차료가 저렴한 것에 기인하며,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연 800개소 정도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경영관리	○ 완공된지 1년 된 사옥을 매각하고 5년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하여 다시 임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임 ○ 58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옥 내 수영장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2015년 결산결과 4,369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외환전문가를 채용할 필요 ○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15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삼정유관은 국정감사 지적을 받자 이름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9개 비축기지 중 동해지사 시설만 유일하게 위탁운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 ○ 공기업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필요
기타	○ 시추선 두성호 노후화로 활용은 못하고 용선료와 수리비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완성하고 인계하지 못하고 있는 시추선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김정훈 위원) ○ 석유공사의 에너지 복지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박정위원)

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관련 - 한국지역난방기술이 최근 경영이 악화되어,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 시 사모펀드에 우선매수권이 있어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으니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별도로 보고할 필요 ○ 지역난방공사가 고배당을 하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 지역난방공사는 홍보비 필요성이 낮음에도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하는 등 홍보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 ○ 상훈보유자 등 포상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사업운영 관련	○ 열수송관이 지진·화산대책법 시행령에 지진설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 ○ 대구지사 연료전환 개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용량을 당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오염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효율적인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중이나, 단일 요금제와 차등요금제 선택에 따른 금액 차이가 미미하여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가 미흡하므로,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의 분산형 전원 기조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 열공급 시설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지적

10. 대한석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운영	○구조조정을 위한 급격한 인력 감원으로 인해 기술력 하락 및 조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직원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공사가 몽골 홋고르탄광에 3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누적 손실이 2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 부실이 심각하므로, 구체적인 매각방안과 손실보전방안을 제시할 필요 ○속옷·양말 등의 손세탁 요구, 산재 발생 시 계약 해지 조건 등 하청업체의 업무시방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으므로 개선 필요 ○법률에 따라 석탄 분야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함에도, 공사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 ○석탄생산 감축대상 선정 및 감축지원비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용역업체 직원에 동등하게 적용할 필요 ○신규 채용을 중단할 경우 조직 자체의 효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지역 사회 공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방안을 마련할 필요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자원 개발사업 전반	○ 자원 가격이 하락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적기임에도 2016년 신규 투자 사업이 없어 에너지안보가 우려된다는 지적 ○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리튬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리스크 총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산출 시 반드시 보증액을 리스크에 포함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초기 투자 시 자원 가격 대비 현재 자원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감안할 때, 투자계획 수립 시 원자재 가격 추이,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 ○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관련 - 볼레오 동광과 암바토비 사업은 금융비용을 포함한 모든 투입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자원 가격 수준이 현재 자원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실적양호'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지적 ○ 필리핀 호몬혼 섬 크롬광산 개발 관련 - 기본 계약 체결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투자비 20억원과 소송비용 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지적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가 서태평양 공해 상의 망간각이 포함된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하였으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희유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광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 ○ 희유금속을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종을 분담하여 비축하고 있으나, 희유금속은 전략 비축대상이어서 광물자원공사로 비축기능을 일원화 할 필요 ○ 북한 자원 현황 파악 등 통일 이후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경영관리	○ 부채 관리를 위해 외국환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필요 ○ 최근 광물자원공사에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
지역 사회 공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방안을 마련할 필요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유사 인근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무역관 거점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신흥국 위주의 지원을 위한 무역관 조정(선택과 집중) 검토 필요 ○ 카드사 부담 해외여행, 퇴직단체에 대한 무상임대, 특수지근무수당 문제 등 기 지적된 문제의 완전한 해소 여부 확인 ○ 과도한 감정노동을 유발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불법을 강요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지침 등 다수의 용역관련 계약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용역근로자 근무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비정상적인 불공정 계약 사항을 시정할 필요
중소·중견 기업지원	○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연계 사업을 모색 필요 ○ 해외전시회 한국관 중복설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비효율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시정이 필요 ○ 지사화사업 관련하여 2016년 목표치(4000개 기업, 24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전담직원의 절대수와 특히, 신흥시장(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지원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완 필요 ○ 해외취업 지원 관련. - 무역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K-MOVE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주력사업화할 필요 - 글로벌 취업상담회에 따른 취업성공률이 2%대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성과 제고 필요 - 글로벌취업상담회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참가하도록 지원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는 것은 부적절함 ○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기능 강화 필요 ○ 대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한 베트남 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대학과 베트남 학생간 연계 교육(한국 커리큘럼의 베트남 대학 공유)과 한국 학생의 베트남 취업 강화 방안 고려 필요 ○ 글로벌지역 전문가(해외 유학생 등)의 네트워크화 및 DB화를 통한 정보 활용 필요 ○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등에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참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EMS 국제배송할인의 활용률이 0.009%로 미미하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해외 투자유치	○ 유턴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재개가 필요하며, 유턴기업 고용보조금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유턴기업 혜택이 줄어든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유턴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미흡하고, 수도권 입주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문제 지적 ○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제조업 투자비중의 감소 및 서비스업 위주 투자로 인해 고용촉진효과가 크지 않고, 비수도권 투자도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 ○ 조세회피처에서의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미미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한 상황인 문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 여부,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노력 필요 ○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이 맺은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20%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에는 MOU 실적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투자유치 실적 제고 필요
기타	○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산업 전반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도 대응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 ○ 밀라노엑스포의 문화부(한국관광공사) 이관 및 총감독 선임 과정의 의문점 지적 ○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4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란 K타워 프로젝트 관련 영풍문 회의에서 미르재단 참석 여부 및 프로젝트 관련 논의 여부 확인 및 LH 공사 보고서에 언급된 K타워의 코트라 입주 계획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투자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13. 한국무역보험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회계,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여 무역보험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운영위원회의 대면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불참횟수가 과도한 위원이 있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므로, 대면회의 활성화와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용역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온코퍼레이션 사건 관련	○ 온코퍼레이션 관련 TFT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도 늦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한 문제가 있음 ○ 온코퍼레이션의 2014년도 7월 이후 현금흐름표 등을 보면 이미 부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보 내의 회계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온코퍼레이션의 고용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등 무역보험의 혜택이 국내 경제로 순환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만 큰 손해를 본 문제가 있음 ○ 전신환거래, 오픈 어카운트 등의 거래방식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현 상황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 ○ 온코퍼레이션 사건이 보험사기적인 측면(미국법인으로의 현금이전과 한국법인의 미국법인에 대한 지분 축소)이 있으며, 미국법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가압류조치가 부족하였고, 무보가 이익을 내는 데 집착하다보니 보험인수심사위원회에서 문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 문제가 있음 ○ 온코퍼레이션 관련 국내외 채권 회수 가능액을 국감 시점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바, 조속히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의 영향으로 무역보험 관련 은행의 대출 축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
해외자원개발 펀드	○ 샌드리지펀드 보증건 관련, 법률 자문의견 미수용 및 지나치게 낙관적인 유가전망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투기적인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지원하는 것은 무역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암바토비, 앵커 유전 등의 문제사업의 리스크 분산 방안이 부재하므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
기금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66배로서 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인 52배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법정 배수 설정 등 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고려 필요 ○ 2009년 이후 중장기성 보험 종목(석유화학, 조선, 해외플랜트 등)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경영위원회와 인수심사위원회의 원안처리율이 93%에 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여신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 모뉴엘 이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재무자료 입수 등 신용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주의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이 기보·신보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업무 중복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 불량채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는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을 강화할 필요
중소·중견 기업 지원	○ 쿠바 진출 관련 지원, 모바일 K-Office 사업 등에서 대기업 지원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등, 대기업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건실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단기수출보험시장의 민간개방에 맞추어 보험금 신청 서류 축소 등 독일 등 해외 선진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한 무역보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본사-지사간 거래를 보험하는 종목의 보험료율이 0.01%로 매우 낮으며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보의 기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지속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조선해양 산업 지원	○ 국내 중소조선사 관련하여, '16년도에 신규 지원이 없는 상황인 바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요건 완화, 국제선박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중소조선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소난골 관련하여 공사가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무보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채권회수	○ 누적 악성 해외채권이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채권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채권미회수 금액이 과다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 채권추심기관, KOTRA 등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최근 5년간 228억원 수준이나 회수금액은 1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보험사기 관련 채권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기금·회계 관리	○ 금융관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기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반기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온코퍼레이션 사고의 경우 사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장기보상채권 대손충당금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기타	○ 무보와 감사원 간 문답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로 자료없음으로 답변하는 등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음

14.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요금 및 판매	○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기관의 예산과 조직을 이용해 본인의 고향(홍성) 지역신문에 본인 홍보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부적절 ○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동문들을 특별승진시키고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 쪽방촌 전기설비 개·보수 사업을 3년만에 종료하면서 일부 지역은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 것은 문제 ○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들이 많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 5세 이하 영유아들의 감전사고 비율이 높으므로 유아용품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 ○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폐지 검토 필요 ○ 지역인재채용 할당제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 ○ 계약서에 이적행위 시 해고 조항을 삽입하는 등 외주용역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들을 하고 있으므로 시정 필요 ○ 2001년 집중호우 때 가로등·신호등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 전기설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 일반용전기설비 미점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가스안전 관리	○ 교량이나 대형 건물들의 가스배관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배관인데 점검이 육안에 의존하고 있고 레이저 검사의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드론을 검사에 적극 활용할 것을 검토할 필요 ○ 도시가스배관, 압력용기 저장 탱크 등 주요가스시설의 절반 이상이 내진 미설계로 안전에 취약한데, 현행 기준이 9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진대비 가스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도서지역의 경우 100㎏ 이상의 LPG는 별도의 보관실에 보관하는 규정이나 여객선 등의 운반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례가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소방용 용기가 아닌 잠수용 용기로 파열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LNG 저장탱크의 경우 14년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누출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것 ○ 170개 독성가스 관련 시설 중 내진 특등급으로 관리되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할 필요 ○ 가스누출 위험 인식을 위해 가스에 첨가하는 유황부취제를 유럽에서 사용 중인 무황부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LPG 용기 수입업자 자격요건 마련 등 수입 LPG용기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LPG 잔가스 처리는 폐차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가스안전공사 차원에서 폐차장 잔가스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차량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CNG, 바이오 가스는 압축과정에서 성분변화 위험 등이 있고 차량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차량 연료로 바이오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할 것 ○ 독성가스 안전설비에 대한 검인증 제도 도입 필요 ○ 경주 지진발생 당시 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았는데, 98년 안전공사가 권고한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시스템임 ○ 20년 이상 노후 중압 도시가스 배관이 30% 수준이나 위험 노후 배관을 먼저 찾아서 조사하는 시스템이 없고, 배관 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간등급 비중이 높으므로 노후배관 우선관리 및 등급 세분화가 필요함 ○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경영관리 기타	○ 청소용역시방서의 용역근로자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16. 한국에너지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할 필요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90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나, 수수료 규모에 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입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가산금 등 다른 방식의 이행촉구수단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최근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고정 REC 계약 해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에너지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
기후변화 대응	○ 탄소 배출권 거래량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과잉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가구에너지 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파수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계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17. 한국전력거래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요금 및 판매	○ 전력거래소에서 예측한 전력량에 비해 실제 발전한 전력량이 적을 때 지급하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력 수요 예측을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 ○ 올해 가장 전력수요량이 많았던 날에는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 ○ 약 1.5%에 달하는 제약 비발전 관련 수요예측 오차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력량이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고 사후 끼워맞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EMS 정보공개가 필요 ○ 감사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경인전력관제센터에 대하여 현재 T.F.를 운영중인데, 조속히 결론을 낼 필요 ○ 경주 지진 당시 전력거래소의 감발지시가 늦은 감이 있었는데, 감발지시의 시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 ○ 350여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차세대EMS가 과거에 개발했던 한국형 EMS와 거의 유사하므로 한국형 EMS 및 차세대 EMS의 연구개발에 사용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그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 있는 인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전체를 공개할 필요 ○ SMP를 고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최저 수입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8. 한국광해관리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운영 관련	○ 수질정화시설이 필요한 전국 233개 광산 중 현재까지 42개의 광산에만 정화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등 폐광산 수질 개선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매출액이 높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10개 모두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있었으므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소 광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산림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단이 산림복구 대집행을 해야 하는 대상 광산에 대한 대집행 추진 실적이 부진하므로, 조속한 대집행 추진과 미집행 광산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출자 회사 관련	○ 출자회사 6개 중 4개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출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관리 필요 ○ 바리오화순 관련 - 사업 아이템조차 발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모두 두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구조조정이 필요 - 바리오화순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지적 ○ 출자회사가 경영 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실제 경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역 사회 공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CEO의 노력이 필요 ○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폐광기금 등 폐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연구개발 (R&D)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화율이 2014년 22.4%로 미진하였는데, 사업화율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에너지기술의 주요 수요자는 공기업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민간기업이 40~50%으로 높고, 공공분야는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분야의 성과가 특히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할 필요 ○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과제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DN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것 ○ 2007년 실시한 원주 RDF 전용 열병합발전소 실증사업 결과로 완공된 발전소에서 당초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내 RDF 폐기물 외에 지역 외 폐기물, 기타 폐비닐 등을 추가로 소각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 ○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R&D 성과가 저조하므로 대기업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 ○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 김녕 국가풍력실증단지 발전기의 블레이드 파손 사례가 있었으므로 풍력발전기 개발시 국내 환경에 맞는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 ○ 2011년부터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 계획을 재평가하여 추진할 것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35년 11%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할 것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조기종료과제와 중도퇴출 과제를 구분관리하고, 중도퇴출 환수기준을 구체화할 것
관리・운영	○ 원장이 허가할 수 있는 2개월의 유급 특별휴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복무규정을 개정할 것 ○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포괄적으로 R&D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음

20. 한국석유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석유 품질관리	○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적발율이 2.5%로 지난 2년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동시험실차량 등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2012년 법률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유가도 하락하였음에도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적발건수와 과징금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에 따른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짜석유 적발 후 시료시험기간 10일동안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 기간단축 등 대책을 검토할 것 ○ 가짜석유 등 판매이익이 처벌에 비해 여전히 큰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제기능을 못하는 현행 식별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속히 대체식별제 도입을 검토할 것
기타	○ 석유관리원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필요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원전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확충할 경우, 관리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됨.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이송한 뒤 실제 처분하기 전까지 인수검사기간(4개월)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수행하는 16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과 거리가 있고, 이렇다 할 대표 브랜드 사업이 없으므로 원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발굴할 필요 ○ 방사성폐기물 인수검사를 할 때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단지 안전관리	○산업단지 영세화로 인한 매각부지의 임대·재임대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산단공이 재난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 ○산단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고 예방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산단 실태조사 이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화학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비 개선을 위한 수선비 지출 규제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 ○산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확대할 필요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원주 반계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입주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 우려가 있으며, 해당 산단에 에너지 공급기반이 마련된 상황이고,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과도 괴리되는 방향이므로, 열병합 발전소 입주계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유턴기업의 국내 유치 및 산단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산업단지 입주 후 산집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매매한 건수가 최근 5년간 80여건, 매매차익이 2,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고 휴폐업 등으로 인한 부지 매각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서 산집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난개발 등의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가 불가능한 공장을 착오로 등록함에 따라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산단 내 쓰레기 등 적치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시설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 ○ 서울디지털단지의 생산, 가동률, 수출실적의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산단 지정해제 및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산업환경 개선 및 구조고도화	○ 부평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가구전시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가구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 ○ 기존 노후된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투자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연 R&D 역량강화,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업종고도화 등 신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강구할 필요
산업단지 개발	○ 기존 산단도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산단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양 대안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지역에 따른 산단 과잉공급 또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초한 통합적 산단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기관운영	○ 카드사 지원 해외여행을 확실히 폐지할 필요 ○ 계약대금 지급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단공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금지급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이전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기여도 확대 필요 ○ 용역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인사경영	○ 인턴 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이 아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진주 본원의 미화·안내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보수 지급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과업지시서를 시정할 것
사업관리	○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및 판매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시험원의 배터리 시험인증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터리 등의 시험인증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관리 및 산업기술정책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적발시스템 강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연구비 환수금의 환수율 제고를 위해 환수기간을 단축하고,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환수절차 개선이 필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전략물자관련 과제를 관리할 필요 ○R&D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R&D사업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에 세제지원 혜택 부여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기술사업화 및 중견기업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활용되도록 국가기술은행 등록비율을 높일 필요 ○완성도 있는 기술 유입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이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기술이전 후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스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 ○연구단계 선정단계부터 사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R&D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기에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 ○R&D 사업화 전담은행의 협약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미래부의 수요발굴지원단과 진흥원의 기술나눔 제도의 중복 문제 검토 필요 ○기술은행 등록 관련 -공공기관의 기술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 중 비공개되고 있는 기술이 모두 열람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활용기술도 등록해서 기술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매출 기여도 등의 성과 부풀리기 시정 필요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모범사례 제시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인턴사업 관련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수를 높일 필요 -결과분석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목표의 수치가 학교별로 임의 작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아니므로 공통의 지표가 필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사업화 노력 필요 ○산업기술 ODA 협력 확대 필요 ○해외의 R&D 기술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 협력 대상국 증가에도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
소재기반 및 지역산업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광역거점사업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업체를 해당 지역 위주로 선정할 필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성과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역 R&D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활용관리가 필요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등 지역기술 거점 기관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역별 특성과 산업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시군구 지역 영세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희망이음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R&D 관리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환수절차 필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적발 시스템 강화, 3회 이상의 부정사용의 경우 국가R&D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연구비 환수금의 환수율 제고를 위해 환수기간을 단축하고,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환수절차 개선이 필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현재 1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R&D과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적정성 검증 기준을 낮추어 강화하는 것이 필요 ○과제기획에 참여한 기획위원은 과제수행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획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할 필요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필요 ○R&D사업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 ○정부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과제 기획 시 산업계 수요, 기술트렌드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 필요 ○국가 R&D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할 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전략물자관련 과제를 관리할 필요 ○RCMS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 추진 필요
개별사업 및 기관운영	○용역업체와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 필요 ○중대형 2차전지사업과 2010년부터 진행된 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의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필요 ○산기평의 지방이전 목적에 따라 이전계획에 따른 대구상주인력(200명) 유지를 위한 노력과 전략기획단의 설립근거 및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시스템반도체 R&D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소재부품 투자연계형 사업은 기술성 평가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추진체계 보완이 필요 ○ 과제 기획 시, 위기의 조선해운업 및 지진 관련 과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

26.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인사경영	○ 코리아디자인센터 및 미래디자인융합센터의 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과업지시서를 시정할 것
사업관리	○ 굿디자인(GD) 마크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자인권의 등록출원 전에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경쟁업체에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자인진흥원의 홍보비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의 단순한 대회 및 전람회 개최 등의 소극적인 홍보 대신 디자인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디자인기업 등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7.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관운영	○ 비정규직 운영 관련 -포괄임금제 개선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시정 필요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개선 필요 ○ 용역계약 관련 불공정 조항 시정 필요 ○ 본부장급 이상 간부진이 모두 서울 출신인데, 향후 간부진 구성 시 지역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 ○ 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
사업관리	○ 연구부정행위 관련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대책 마련 필요 -소속 연구원이 자신의 딸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부정행위가 고3 딸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 보고서 제출 필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필요

28. 한국전력기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노조 간부가 금품을 수수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모 대기업 간부가 한국전력기술 간부들에게 골프장 접대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청렴도 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3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시정 필요 ○ 파견업무 용역서비스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의 업무 중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는 민간에 개방할 예정인데, 참여가능한 업체 리스트를 보면 한전기술이나 한수원 출신 직원이 없는 업체는 69개 중 34개밖에 되지 않음. 유착관계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9. 한국가스기술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리・운영	○ 공사는 경정비 공사를 특정 5개 업체가 과점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계약 입찰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기존 과점 업체들이 담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 이건영 감사의 선거출마기간 중 불합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이므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임금을 반환하거나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 상임・비상임 이사의 가스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필요 ○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는 지급하고 있으나, 상여금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30. 한전KDN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장애인 고용률이 2.49%에 불과하므로 제고 노력 필요 ○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했다가 사기 등으로 판명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31. 한전KPS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최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전 KPS의 화력발전기 정비 기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민간 정비업체의 정비수행 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곧바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업무의 6% 정도를 경상정비도급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수수료만 받는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시정 필요 ○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시정 필요 ○ 수의계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한전 KPS 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대비 3~40%에 불과하므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 ○ 2001년에 국무총리가 폐지를 지시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폐지 필요

32. 한전원자력연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방사능폐기물저장고 등 주요 시설의 내진등급이 2등급에 불과하므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33. 기초전력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일본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20명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기초전력연구원이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에 좀 더 투자할 필요

34. 강원랜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및 영업부문	○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불법 대출 근절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강원랜드가 카지노에 컨벤션센터, 전시회, 박람회, 레저관광산업 등을 융합하여 MICE 산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자테이블 중 상당부분이 전자카드가 아닌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자테이블 도입을 통해 게임 횟수나 베팅금액 등을 기록하여 도박중독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금 투입 방식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자테이블 도입을 금지할 필요 ○ 공익 제보자 색출 시도 등 직원의 수뢰와 배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지적 ○ 상여금, 어린이집, 건강검진 지원, 휴게시설 등 외주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과 강원랜드 정규직간의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워터파크 설계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 ○ 강원랜드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럼오래의 회원이 강원랜드에 취업하였으며, 행사 시 숙박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 실적에 따라 손님에게 지급하는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를 개인별 하루 사용액 상한을 8만원, 가맹점별 월 판매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하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 ○ 슬롯머신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정한 바에 따라 슬롯머신 운영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슬롯머신 운영·보수 관련 기술 개발 등 자체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강원랜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워터파크사업·운탄고도사업이 강원랜드의 출자회사처럼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도박중독	○ 강원랜드는 최근 3년 동안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규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매출총량규제를 준수할 필요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카지노 입장료를 인상할 필요 ○ KL중독관리센터 관련 - KL중독관리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강원랜드의 전체 순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 - KL중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중독 조사 및 연구활동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다는 지적 - 상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담전문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 - 공모를 통해 선정된 KL중독관리센터의 센터장이 중독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의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혹을 제기 - KL중독관리센터를 강원랜드 산하기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보건복지 산하기관으로 변경할 필요 ○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를 상향조정 하는 등 도박중독 관리를 강화할 필요
지역사회 공헌 관련	○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강원랜드가 당기순이익의 1%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것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재단의 역할 강화	○ 일본기술자초청 국내기업애로기술 사업관련 지방기업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노력을 강화할 것

36. 전략물자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전략물자 불법수출 발생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예산 확대 및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법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보 확대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전략물자관리원의 소규모 인원(37명)과 예산으로는 불법수출 억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수출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국민 설문조사 결과 원전을 줄이자는 응답이 늘어난 것은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므로 실효성있는 홍보활동 필요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관운영	○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 자격이 없고 국가 수혜금을 받는 민간업체 사장이 공공기관의 의사회 의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장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 ○ 특별채용과 채용인원을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인사채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비정규직 차별 및 청사 시설관리 용역계약 간 불공정 조항 시정 필요
사업관리	○ 해외 로봇기업의 국내 진출 및 M&A로부터 국내 로봇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이사회 소속 업체에 과제가 지원된 문제를 시정하여, 이사회 소속 업체가 지원 과제 참여 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 ○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을 의장으로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 ○ 로봇산업 실태조사 시 SI(시스템통합) 업체 조사 실시 필요 ○ 서비스용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수요창출, 로봇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로봇산업 글로벌화 필요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사업 실적 및 제조지원 장비 가동률 제고 필요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AMI 확산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40.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금지원	○ 창업자금 대출시, 기술성 위주의 평가 필요 - 기술평가등급을 담보 유무에 따라 대출기준을 2단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문제 ○ 특허담보대출의 경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대출하는 문제 지적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처벌 및 근절 필요,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정책자금 불법 컨설팅 방지 필요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약정해지 증가문제에 대한 지적
기타	○ 직원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처신에 대해 지적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상공인방송 운영 내실화	○ 소상공인방송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아니라 방송 컨텐츠를 잘 만들 필요
기타	○ 전통시장 카드 사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사업관리	○ 지난 5년간 R&D 환수율 34.6% 수준이므로 철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수율을 높여나갈 필요

4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전문엔젤 제도	○ 전문엔젤 풀을 확대하고 창업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이 대폭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44. 중소기업유통센터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중소기업 판로 지원	○ 행복한 백화점 운영 개선 -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제품이 입점하여, 이들 제품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크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입점 수수료 차별화, 매장 위치 또는 제품전시 재배치 등 중소기업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대행사업 개선 - 중소기업이 홈쇼핑사와 중소기업유통센터 두 곳 모두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중 수수료 문제를 지적 - 현재 중소기업이 0.9%~3% 수수료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납부하는 문제 개선 필요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용홈쇼핑 벤더수수료율(3%) 문제, 익익월 3일까지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결제 일문제 등을 지적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보유했던 (주)쇼핑엔티의 지분 변동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와 함께 남은 지분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

4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조직운영	○ 전임 특허청장에 대한 출입카드 발급, 사무실 제공, 특혜 수당 지급 등 비합리적인 전관예우 시정 필요 ○ 정원 및 조직 확대, 원장 선임 등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서면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 부실 운영의 시정 필요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법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해산 등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용역근로자 처우개선과 부당한 과업지시서 등의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므로, 전수조사 등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할 것

(3)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4)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노사합의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5) 산하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 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

(6)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지역 공공기관 간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7) 산하기관의 비위 적발자가 5년간 500명이 넘는 상황이므로,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할 것

(8) 민간근무휴직 시 대기업 취직보다는 중소기업 파견을 통한 현장 경험 취득이 필요하며, 공직 복귀 후 민간 대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것

(9)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영이 부실하거나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회사가 5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10)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

(11)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 회사 등의 매각, 기능조정 등 부실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

(12)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등에서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고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임원 공모 관련 자료들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할 것

(14) 장차관실 기타운영비와 관련, 임의적 지출이 아닌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에 의한 지출방안을 마련할 것

(15) 각종 위원회의 조사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기준 없이 제각각 집행되고 있으므로 각급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

(16)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손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분석자료가 없는 등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선업 통폐합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문제가 되는 분야는 해양플랜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조선사들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난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8)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3,000개사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도 법정관리로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업,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 창출 방안을 산업부 차원에서 선제적·주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방안과 산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의 이월·불용이 많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채권확보 조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 30대 대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21) 노동배제적인 산업정책에서 노동을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22) 스마트공장 보급 수준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기초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고도화를 도모할 것

(2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4) 수출로는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산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25)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의 집행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

(26)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지역 균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점검할 것

(27) 신산업 창출, 특히 스타트업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8) 혁신도시 관련 지역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9) 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전경련 등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0) NEET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산업 현장에 대한 연계성이 강한 산업부에서 고용연계 교육 정책에 보다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년 연속 정관 규정을 어기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운영비 예산을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32)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LNG선박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가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33) 기술유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인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법제화할 것

(34)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5)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적발 시스템 강화, 3회 이상의 부정사용의 경우 국가R&D과제 참여 제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6) 연구비 환수금의 환수율 제고를 위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등 환수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7)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

(38) R&D전략기획단 관련

① R&D전략기획단이 출범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

② 전략기획단의 설립근거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39)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

(40)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R&D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4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방지할 것

(42) 산업기술 관련 기관들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

(43)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전략물자관련 과제를 관리할 것

(44)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것

(45) R&D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할 것

(46) R&D 사업화 전담은행의 협약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7)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48)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에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

(49) 소형 민수·무장헬기 개발사업이 해외 노후 기종을 떠맡고 핵심 기술도 이전받지 못하는 등 실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50) 조선산업에 만연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51) 산업부 산하 위원회가 업주 대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업주 단체들의 컨설팅 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구조조정 정책 등에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

(52) 탄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를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

(53)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대로 된 2차 계획을 수립할 것

(54)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

(55)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을 의장으로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할 것

(56)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7)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것

(58) 석유화학단지의 내진설계 완비여부 및 지하배관의 안전성에 대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59) 청년층의 미국 닭공장 이민, 고학력 유학생의 미국 잔류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해외인력발굴프로그램,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등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60)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진해운사태・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등으로 인하여 수출여건도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61) 북한이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기획, 설계 개념까지 포함된 Korea Made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2) 전략물자와 관련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수출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적

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63)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유출 후 노동자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철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유사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64)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 대형유통매장 설립을 위한 외투법인 설립에 페이퍼컴퍼니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66)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6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NCP(National Contact Point)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철저히 점검할 것

(68) 유턴기업 유치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원제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69) 무역상대국의 상계관세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동향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할 것

(70) 경제자유구역이 유사특구와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며,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제특구에 대한 활성화 및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것

(71)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잠진-용유도 지역의 연도교 건설이 경제자유구역 내 잠진-무의도 연도교 건설과 연계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

(72)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73)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며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할인과 함께 행사기간 중 백화점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75) 콜레라균과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에 관해 현재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소 1년으로 줄이고, 검사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76)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콜 대상 제품이 여전히 유통매장과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바, 리콜조치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7)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이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8)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폐업한 경우 표준원이 리콜제품을 직접 수거하고 리콜제품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9) KS인증 제품의 시판품조사 대상이 시공물인 경우, 필요시 기존의 샘플링조사 대신 시공물 자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표준을 개정할 것

(80) 최근 LED 제품의 리콜명령에 따른 회수율이 42.3%에 불과하고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LED 제품의 인증단계부터 리콜이행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81) 갤럭시 노트7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을 검토할 것

(82) 차선 도색용 유리알에 대한 KS 표준이 특정업체의 품질관리 기준과 유사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표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

(83)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14.8)'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향후 부처 간 제품안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84) 미국의 냉연·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응 관련,

① 이후 이어질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WTO 제소 등 대응의지를 피력할 것

②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에 대해서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③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것

(85) 중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긴 처리기간, 투명성 결여, 시험성적서 불인정 등 여러 비관세장벽에 기업차원의 대응이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할 것

(86) 한·칠레FTA 재협상에서 그동안 양허 예외,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해 왔던 400여개 칠레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논의대상인데,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

(87) 미국과 인도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무역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88)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예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예상 경제성장률이 실제 경제성장률과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제반 변수를 보다 면밀하고 다양하게 검토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② 최대 전력에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포함시키고 있어 전력계통의 부하와 발전기의 출력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전력수요가 과다예측되어 설비의 과잉공급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 부하에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을 제외하고 별도로 발표할 것

(89) 석유 비축·유통질서 관련

① 한국석유공사의 울산부이(BUOY)이설 공사에서 부이를 신규 구매하려는 계획을 개보수로 전환하였는데, S-OIL과 같은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② 지위승계를 이용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의 중복적발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③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3년간 50건에 달하고, 440여 업소 중 320개 업소가 의무구매 물량(50%)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알뜰주유소 중 안심주유소 가입현황도 낮아 관리가 미흡하고, 국내기름값 인하효과도 미미하므로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할 것

④ 유가인하를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이용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왔으나, 여전히 장외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만 전자상으로 하는 협의매매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효과가 미흡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90) 도시가스 공급·요금 관련

① 일부 시·도는 지역난방 보급확대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완화하였으나,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검침비는 인하되지 않았으므로 시도별로 상세히 점검하여 이를 요금인하에 반영할 것

②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급계획의 목표수요전력과 기저발전 건설계획 등의 오차를 줄여 가스수급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1) 가스 안전 관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배관 내진설계율이 45%로 미흡하고 서울지역이 특히 취약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올해 전통시장 가스시설 일제점검 결과 6,709개 업소 중 2,269개 점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내용도 누출기 차단 이상, 환기불량, 중간밸브 미설치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92)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①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성과가 2015년 감사원의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자구노력은 부족한 수준으로, 빚내서 빚을 갚는 폭탄 넘기기가 지속되고 있어 해법을 제시할 것

② 에너지 가격이 낮은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할 것

③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을 에너지공기업에만 맡겨두어 소극적 대처와 자구책 마련에 급급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처 차원의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것

④ 해외자원개발 주요사업인 하베스트, 다나, 암바토비, 볼레오, 홋고르 사업에서 약 11조 3,000억원의 투자 이후 9조 1,000억원의 자산손상이 있었고 자산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편성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정부의 회생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것

⑤ 폐지된 성공불 융자와 유사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예산의 편성을 심사숙고할 것

⑥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부실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것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할 것

(94)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 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

(95)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신사옥 건설, 용역 및 물품 구매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약 위반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부실계약, 부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96)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폐광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폐광기금에 대한 사후점검·성과평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금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

(97) 재제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98) 석탄·연탄가격의 인상에 따라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9) 원전의 안전성 강화

① 원전 주변지역의 지질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필요성 및 다수호기 전력계통 안전성검사 등 안전성 보완 조치 시행을 검토할 것

② 내진검증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원전들의 내진검증문서를 조속히 마련할 것

③ 설계수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호기들에 비해 지진에 더 취약한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검토할 것

④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원전개선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대책들을 조속히 완료할 것

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원전개선대책 완료와 관련하여, 계획만을 수립한 채 완료라고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만을 완료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⑥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⑦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원전 해체 충당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0) 전기의 총괄원가 및 종별원가를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1)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력소매시장의 개편을 검토할 것

(102)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납부기간 내 미납시 연체료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103)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은 아직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전력시장 민영화 우려 등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전환 후 전력요금 인상 등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그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10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5)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규정대로 매년 수립할 것

(106)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비중앙급전 발전기의 용량을 제외할 것

(107)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작업반 구성방안을 마련할 것

(108) 전력피크 기간에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9) 신재생에너지 R&D의 비중을 원자력·화력발전 R&D의 비중보다 높일 것

(110) 전력기금 중 전기안전·전기절약 홍보예산과 원자력 홍보예산의 적정 비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111)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

(112) 배전공사 입찰 시 중복낙찰 금지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3) 발전 5개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따라 하청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에 대하여 산업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114) 경영비효율 해소를 위해 발전 5개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5) 전기차 구매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116)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7)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118) 많은 국비가 투입된 1,000Mw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은폐 및 축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엄밀히 조사하고 향후 국가 R&D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

(119) 비발전 정산금을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0)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121)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할 것

(122) 태양광 발전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적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123)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4) 풍력발전기 전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

(1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달성 목표를 2012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

(126) 발전사의 석탄·우드펠릿 혼소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드펠릿 혼소 방식을 지양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대할 것

(127)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28) 장기융자, 고정수익 보장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농민주도형 농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129)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지자체별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표준화할 것

(130)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제품 출시 당시보다 강화된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131)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

(132)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①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생존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할 것

②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에너지 이용에 있어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2. 중소기업청

(1) 생계형 중소자영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3)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획기적인 시청률 제고 등 소상공인방송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복합쇼핑몰 입점시 영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할 것

(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원 확대

①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 상승, 고용 증가 등 지원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확대에 노력할 것

② 지역 소공인들에게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것

(8)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간접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나들가게사업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나들가게 영업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의 운영시간 및 운영 인력을 확대 할 것

(1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간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12)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

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 등을 강화할 것

②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한 판매처를 확대할 것

③ 구매 제한액을 완화하고 공공·기업부문 상품권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3) 전통시장과 공공기관 등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매결연 활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 2017년 종료되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후 지원 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

(15) 전통시장 화재 관련 불량시설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것

(16) 월드클래스 300 사업 운영 개선 관련

① 지원기업 선정 시 지역 및 업종 편중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②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의 지원 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 재도전패키지 선정기업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18)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융자·보증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19)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우선손실충당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크라우드펀딩 한도 완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것

(21)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발급 시 학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력 제한 제도를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할 것

(22) 창업생태계 기반이 없는 창업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창업기초를 건실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23) 입점 수수료 차별화, 매장 위치 또는 제품전시 재배치 등 중소기업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행복한 백화점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24) 중소기업이 0.9%~3%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문제 등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대행사업을 개선할 것

(25)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용홈쇼핑 벤더수수료율(3%)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할 것

(26) 홈앤쇼핑 운영 개선

① 판매수수료를 인하, 황금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을 확대, 대기업 제품 판매 이익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 25% 이상 유지 등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② 농협,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홈앤쇼핑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관련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이나 수의계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것

①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 여부 검증 능력을 제고
②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28) 창업자금지원 시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

(29)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을 내실화 할 것
①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고 있는지 현장 확인
②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한 사항 발생 여부 확인
③ 사업 성과지표를 취업률에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④ 전북 지역의 특성화고의 사업 참여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30) 전체 국가 R&D의 3.8% 수준인 중소기업 R&D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의 지역편차 문제를 개선할 것

(3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의 구매 약속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2)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것

(33)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장비 활용률을 높일 것

(34) 중소기업청 소관 R&D 자금 유용에 대해 관리감독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할 것

(35) R&D 성공률 대비 낮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것

(36)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특허청

(1) 국가 간 특허심사 경쟁시대에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조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인사상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할 것

(4)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5)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DESK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 당국 및 타 부처와 협력할 것

(6) 특허지원창구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7)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와 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것

(9)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0) 특허청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의 유사·중복을 시정할 것

4. 한국전력공사

(1) 전기의 총괄원가 및 종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원가연동제 또는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

(3) 미곡처리장에 농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특히 전기요금 정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6) 검침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상승율과 건설노무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현장검침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조정할 것

(7) 안전업무 관련 기본 매뉴얼을 실효성있게 개정할 것

(8) 도급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9) 보다 많은 변전소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할 것

(10) 배전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를 시정할 것

(11)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특히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전액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있는 당진에 추가로 송전탑을 건설할 때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것

(13)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시 동일인이 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인이 다른 업체가 낙찰받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등 규정을 개선할 것

(14) 입찰제한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사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통신사와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전봇대에 무단으로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사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변전소·선로 등 설비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7)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회사들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18)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20) 한전의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규정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할 것

5. 한국수력원자력

(1) 원전 주변지역의 지질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필요성 및 다수호기 전력계통 안전성검사 등 안전성 보완 조치 시행을 검토할 것

(2) 원전 주변지역 지진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것

(3) 한수원의 지진계측값과 KINS의 지진계측값의 차이를 좁힐 것

(4) 설계수명이 지났고 다른 원전보다 지진에 취약한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검토할 것

(5) 내진검증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원전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모든 원전의 내진 검증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6)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하고 관련지침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재난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할 것

(8)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채용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9) 원전 출입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원전의 출입관리를 강화할 것

(10)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이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한수원보다 사고율이 현저하게 높은 위탁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12) 허위로 파악된 원전 부품들을 즉시 교체할 것

(13) 원전에 출입하는 주둔 군장병 전원에 대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14)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예정된 장소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용후핵연료가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할 것

(15) 원전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들 또는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통해 계속 한수원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6)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할 때 강의료와 출장료를 함께 받는 관행을 근절할 것

(17)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고성능 밀폐형 방수문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18) 발전기 정비인력의 경우 10년 정도의 숙련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정비인력의 64.9%가 근무기간 5년 미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9) 모든 댐의 안전확인계측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한 계측기들을 교체할 것

(20)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원전개선대책 완료와 관련하여, 계획만을 수립한 채 완료라고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만을 완료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 발전5개사

(1) 원가가 부당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원가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RPS 실적 중 우드팰릿의 비중을 낮출 것

(4) 위탁업체 직원들의 사고비율이 높으므로 위탁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5) 2014년 이후 준공한 발전소들의 지진 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것

(6) 연구개발비 예산,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확대할 것

(7)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발전소 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8) 발전소 철거 시 공사와 고철매각을 일괄 발주하는 방치매각방식을 지양할 것

(9) 중복되는 주제의 용역들을 동시에 발주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자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비중을 축소할 것

(10)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산 터빈 도입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터빈 도입 과정에서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1) 내부 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외부위촉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할 것

7. 한국가스공사

(1)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① GLNG사업은 투자비가 1,000억원 증가하여 사업전망이 악화되는 등 관리역량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② 이라크 아카스 사업을 위해 구매한 기자재를 사업중단으로 대체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자재가 손상되는 등 보관상태가 나빠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③ 41개 해외 출자회사 중 2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17개는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해외투자사업 평가결과 C, D 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실시할 것

④ 이라크 바드라 사업의 경우 유가하락과 관계없이 생산량, 내부수익률 등이 당초보다 하락하고 생산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이라크 정부와 재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할 것

⑤ 우리 도시가스 인프라가 포화상태이고 해외 중하류 인프라 구축은 유망한 상황이므로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⑥ 우즈벡 CNG, 실린더 사업은 순이익 미실현, 낮은 배당전망에도 자산평가 B군으로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사업성이 높음에도 유동화대상이 아닌 매각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일관되지 않으므로 평가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길 것

(2) 천연가스 도입 및 안정적 공급관련,

① 가스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공 통합 천연가스수급협의회 등을 만들어 수요예측 정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민간 직수입자는 과거 가격이 낮으면 직수입하고 가격이 높으면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등 수급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서 민간 직수입 정책을 재검토할 것

③ 가스수급계획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야 하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④ 발전용 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으나 분산형 전원 등 LNG발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전력수급계획에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⑤ LNG 운반선 4년간 용선비용이 건조비용과 같은데 용선만 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을 분석하여 직접 건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적선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우리 조선사에 발주하도록 유도할 것

⑥ 가스공사가 국제시장의 Buying Power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제5인수기지 건설시 국제적 트레이딩을 위한 동북아 LNG허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⑦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추진이행 각서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가스배관 설비 준공 후 도시가스사의 공급시설 미비로 설비가 유휴화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속히 해결할 것

(3) 도시가스 요금 및 보급 개선

① 천연가스보급 여부를 공사의 경제성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원도, 전라도 등 천연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② 산업용 대기업 수요자는 싼 가격에 공급받고 가격 상승시 대체연료로 전환하여 원료비 미수금은 일반국민에게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③ 일부 대기업은 반복적으로 가스냉방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

(4) 경영관리

①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2013년, 2014년 연속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데 이어 2015년도에도 D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관장이 뇌물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이므로 신뢰도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

② 성과연봉제 도입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구성원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

③ 저성과자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 협의할 것

④ 인천 LNG 저장탱크 3기 건설시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움을 체결하였는데,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필요물품 공급에 소상공인도 참여하도록 할 것

⑤ 가스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기존 연봉의 2배 수준을 받은 사례, 약 36억원의 도시가스 요금 부당감면 사례의 대책을 마련할 것

⑥ 주재지 소득세가 국내 수준을 초과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대상이 아닌 아카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특혜가 과도하므로 시정할 것

⑦ 인천기지본부 수입 LNG 수입세 미납 및 삼척기지 건설단 공유수면매립지의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로 인한 약 60억원의 가산세 납부 사례는 기강해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⑧ 주배관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 관련 총 39건의 담합으로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담합한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이들이 다시 입찰에 응하고 있으므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⑨ 퇴직자 단체인 사우회가 만든 청우인텍과 수의계약이나 형식적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시정할 것

⑩ 사장 취임이후 신윤리경영을 선포하였음에도 가산세 부과 문제,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⑪ 서울동부지사를 이전하면서 노원구 유휴공간을 가스홍보관으로 건설 중이나 당초 가스안전체험관 계획과 달리 대기업 가스기기 전시관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⑫ 공기업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것

⑬ 홍보비로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 현장 지원을 2회 실시하였는데, 이는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향후 지원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를 실시할 것

⑭ 외국제조사와의 에이전시 계약서를 위조하여 형사고소된 월드하이테크사가 부정당업체 지정 이후에도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하여 사업 중이므로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처할 것

(5) 안전관리 및 기타

① 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라 두고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내용연한이 초과하였고 경주지진 발생시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수치 상승에 따른 대처도 안일하였으므로 향후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나 도시가스사업자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가스공사 생산기지만 수립하고 있고 본사와 정압관리소는 수립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립여부를 확인할 것

③ 2015년 감사원 감사로 예선 계약기간을 단기화하고 계약을 공개하며 적정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타 지역 예선업체가 참여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④ 가스공사는 재난대비 비상발전을 디젤발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가동가능기간이 3일이 채 안되므로, BOG(증발가스) 이용방안 등의 대책을 모색할 것

⑤ 용접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는 피폭사례가 있고 방사선 투과량을 낮추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후에는 작업시간만 2배로 늘어나고 방사선 피폭 저감 효과가 미흡하므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안한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도입을 검토할 것

8. 한국석유공사

(1)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① 하베스트는 청산시 1조 2천억원 이상의 비용과 운영시 2020년까지 1조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므로, 자산 세부재평가를 거쳐 정부출자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다시 국회와 협의할 것

② 잠빌광구의 경우 탐사를 위해 별도 시추선을 건조하고 건조비용을 타 광구 용선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활용이 저조하고 매각도 되지 않은 채 유지비용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③ 저유가 시기에 무리하게 자산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고유가 시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것

④ 해외 자회사의 누적 투자액 대비 누적 회수액이 2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자회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⑤ 기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실 실태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

(2) 석유비축사업,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① 비축시설의 내진성능 검토를 설계도면 평가로 대체하거나 평가주기가 긴 상황이므로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되어 안전이 우려되고 과도한 시설유지비가 발생하는 석유비축시설의 교체를 검토할 것

②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저장시설 규모에 비해 최근 KPMG를 통해 실시한 용역결과 필요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

③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동북아 오일허브에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것

(3)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①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약 36원은 외곽에 소재하여 임차료가 저렴한 것에 기인하며,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연 800개소 정도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상황이므로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4) 경영관리

⑦ 완공된지 1년 된 사옥을 매각하고 5년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하여 다시 임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재검토할 것

⑧ 58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옥 내 수영장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⑨ 2015년 결산결과 4,369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외환 전문가를 채용할 것

⑩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15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삼정유관은 국정감사 지적을 받자 이름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⑪ 9개 비축기지 중 동해지사 시설만 유일하게 위탁운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직영으로 전환할 것

⑫ 공기업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것

⑬ 시추선 두성호 노후화로 활용은 못하고 용선료와 수리비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 완성하고 인계하지 못하고 있는 시추선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⑭ 석유공사의 에너지 복지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

9. 한국지역난방공사

(1) 열수송관이 지진설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2) 대구지사 연료전환 개체사업에 환경오염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할 것

(3) 단일 요금제와 차등요금제 선택에 따른 금액 차이가 미미하여 차등요금제 운영에 따른 효과가 미흡하므로, 차등요금제 운영을 재검토 할 것

10. 대한석탄공사

(1) 구조조정을 위한 급격한 인력 감원으로 인해 기술력 하락 및 조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직원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사가 몽골 홋고르탄광 사업의 부실이 심각하므로, 구체적인 매각방안 및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3) 하청업체의 업무시방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많으므로 개선할 것

(4) 법률에 따라 석탄 분야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함에도, 공사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내용이 있어 부적절하므로, 계약 조건을 개선할 것

(5) 석탄생산 감축대상 선정 및 감축지원비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용역업체 직원에 동등하게 적용할 것

(6)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안을 마련할 것

(7) 신규 채용 중단 시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 문제를 협의할 것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리스크 총량제를 실시하고, 리스크 산출 시 반드시 보증액을 리스크에 포함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

(2) 투자계획 수립 시 원자재 가격 추이,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할 것

(3)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4) 기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실 실태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

(5) 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부채 관리를 위해 외국환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것

(7) 희유금속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광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것

(8) 희유금속의 비축기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9) 북한 자원 현황 파악 등 통일 이후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10)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안을 마련할 것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장을 묶어 관리하는 방안 및 신흥국 위주의 지원을 위한 무역관 조정(선택과 집중) 방안을 검토할 것

(2) 용역근로자 근무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비정상적인 불공정 계약 사항을 시정할 것

(3)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의 연계 사업을 모색할 것

(4)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중복설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비효율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시정할 것

(5) 지사화사업 관련 전담직원의 절대수와 특히, 신흥시장(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지원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적 자원을 보완할 것

(6)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K-MOVE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주력사업화하고, 글로벌 취업상담회에 따른 취업성공률이 2% 대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7)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8)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

(9) 대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한 베트남 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대학과 베트남 학생 간 연계 교육(한국 커리큘럼의 베트남 대학 공유)과 한국 학생의 베트남 취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10) 글로벌지역 전문가(해외 유학생 등)의 네트워크화 및 DB화를 통한 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11)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등에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참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것

(12)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EMS 국제배송할인의 활용률이 매우 미미하므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것

(13) 유턴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 재개방안과 유턴기업 고용보조금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유턴기업 혜택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할 것

(14)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제조업 투자유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투자도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5)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 여부,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

(16)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이 맺은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20%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에는 MOU 실적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17)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4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3. 한국무역보험공사

(1) 회계, 법률 전문가를 보강하여 무역보험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2) 운영위원회의 대면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불참횟수가 과도한 위원이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하므로, 대면회의 활성화와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용역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온코퍼레이션 관련, 특별대응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도 늦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한 문제가 있으며, 온코퍼레이션의 2014년도 7월 이후 현금흐름표 등을 보면 이미 부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보 내의 회계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내부 전문성 강화 및 국내외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

(5) 온코퍼레이션의 고용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등 무역보험의 혜택이 국내 경제로 순환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만 큰 손해를 본 문제가 있었으므로, 무역보험 인수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다 고려할 것

(6)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의 영향으로 무역보험 관련 은행의 대출 축소 등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 암바토비, 앵커 유전 등의 문제사업의 리스크 분산 방안이 부재하므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8)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66배로서 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인 52배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법정 배수 설정 등 기금배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2009년 이후 중장기성 보험 종목(석유화학, 조선, 해외플랜트 등)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경영위원회와 인수심사위원회의 원안처리율이 93%에 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이 내부직원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여신전문가 영입 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

(11)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재무자료 입수 등 신용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주의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

(12)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이 기보·신보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업무 중복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13) 보험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고, 이를 위하여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

(14) 쿠바 진출 관련 지원, 모바일 K-Office 사업 등에서 대기업 지원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등, 대기업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15) 단기수출보험시장의 민간개방에 맞추어 보험금 신청 서류 축소 등 독일 등 해외 선진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무역보험 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16) 본사-지사간 거래를 보험하는 종목의 보험료율이 0.01%로 매우 낮으며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보의 기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17) 누적 악성 해외채권이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채권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채권미회수 금액이 과다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 채권추심기관, KOTRA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

(18)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최근 5년간 228억원 수준이나 회수금액은 1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보험사기 관련 채권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9) 금융관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기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반기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온코퍼레이션 사고의 경우 사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장기보상채권 대손충당금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14. 한국전기안전공사

(1) 기관의 조직·예산을 사장 개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학연·지연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조치를 할 것

(3) 낙뢰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물들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유아용품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5)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

(6) 외주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

(7) 감전사고 위험이 많은 가로등·신호등 등의 전기설비들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 일반용전기설비 미점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전국 모든 지역의 쪽방촌 전기설비 개·보수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할 것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 교량이나 대형 건물들의 노후가스배관의 점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검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가스배관, 압력용기 저장 탱크 등 주요가스시설의 절반 이상이 내진 미설계로 안전에 취약한데, 현행 기준이 9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진대비 가스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3) 도서지역의 경우 100㎏ 이상의 LPG는 별도의 보관실에 보관해야하는 규정이나 여객선 운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소방용 용기가 아닌 잠수용 용기로 파열시험을 하고 허위·부실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것을 시정할 것

(5) LNG 저장탱크의 누출사고 방지 등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것

(6) 독성가스 관련 시설의 내진 특등급 관리 필요성 등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7) 가스누출 위험 인식을 위해 가스에 첨가하는 유황부취제를 유럽에서 사용중인 무황부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LPG 용기 수입업자 자격요건 마련 등 수입 LPG용기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9)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LPG 잔가스 처리는 폐차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가스안전공사 차원

에서 폐차장 잔가스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10) 차량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CNG, 바이오 가스의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차량 연료로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독성가스 안전설비에 대한 검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12) 20년 이상 노후 중압 도시가스 배관의 우선관리 및 등급 세분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청소용역시방서의 용역근로자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16. 한국에너지공단

(1)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할 것

(2)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나, 수수료 규모에 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입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가산금 등 다른 방식의 이행촉구수단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고정 REC 계약 해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에너지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

(5)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6) 주파수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계측시스템을 마련할 것

17. 한국전력거래소

(1) 전력 수요예측의 오차율을 낮추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제약비 발전 정산금을 낮출 것

(2) 감발지시의 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것

(3) 공정성 있는 인사들로 비용평가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록 전체를 공개할 것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최저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경인전력관제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6) 가장 전력수요량이 많은 날에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전력량의 실시간 조회제도 도입 등 EMS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

18. 한국광해관리공단

(1) 폐광산 수질개선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감사원 감사결과 매출액이 높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10개 모두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있었으므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3)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소 광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4) 산림복구 대집행 추진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미집행 광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5) 출자회사 관련

① 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가 부채비율이 높고 누적적자가 상당규모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자회사의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② 출자회사 중 바리오화순은 사업 아이템조차 발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

(6)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인력 충원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안을 마련할 것

(7)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폐광기금 확대 등 폐광지역 경제회생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중소·중견기업 R&D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화율이 2014년 22.4%로 미진하였고 공공분야에서 실시한 과제의 사업화율,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분야의 성과가 특히 저조하므로 사업화율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2)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과제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DN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것

(3)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R&D 성과가 저조하므로 대기업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

(4)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 김녕 국가풍력실증단지 발전기의 블레이드 파손 사례가 있었으므로 풍력발전기 개발시 국내 환경에 맞는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

(5) 2011년부터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 계획을 재평가하여 추진할 것

(6)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35년 11%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할 것

(7) 조기종료과제와 중도퇴출 과제를 구분관리하고, 중도퇴출 환수기준을 구체화할 것

(8) 원장이 허가할 수 있는 2개월의 유급 특별휴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복무규정을 개정할 것

20. 한국석유관리원

(1)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적발율이 2.5%로 지난 2년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동시험실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2012년 법률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유가도 하락하였음에도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적발건수와 과징금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

(3)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에 따른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 가짜석유 적발 후 시료시험기간 10일 동안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검사 기간단축 등 대책을 검토할 것

(5) 가짜석유 등 판매이익이 처벌에 비해 여전히 큰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 석유관리원이 전경련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히 탈퇴할 것

(7) 제기능을 못하는 현행 식별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식별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할 것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인수검사기간을 보다 단축할 것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수행하는 사업 중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지양하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발굴할 것

22.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 영세화로 인한 매각부지의 임대·재임대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

(2)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취하고, 산단공이 재난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

(3) 산단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고 예방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4) 산단 실태조사 이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화학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비 개선을 위한 수선비 지출 규제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것

(5) 산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확대할 것

(6) 원주 반계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입주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 우려가 있으며, 해당 산단에 에너지 공급기반이 마련된 상황이고,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과도 괴리되는 방향이므로, 열병합 발전소 입주계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7) 유턴기업의 국내 유치 및 산단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

(8) 산업단지 입주 후 산집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매매한 건수가 최근 5년간 80여건, 매매차익이 2,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고 휴폐업 등으로 인한 부지 매각에서 산

집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9)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난개발 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0)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가 불가능한 공장을 착오로 등록함에 따라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산단 내 쓰레기 등 적치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2)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시설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것

(13) 서울디지털단지의 생산, 가동률, 수출실적의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산단 지정해제 및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부평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가구전시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 가구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

(15) 기존 노후된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연 R&D 역량강화,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업종고도화 등 신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강구할 것

(17) 기존 산단도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산단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양 대안을 마련할 것

(18) 지역에 따른 산단 과잉공급 또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초한 통합적 산단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9) 계약대금 지급의 지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이전한 지역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21) 용역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인턴 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이 아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2) 진주 본원의 미화·안내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보수 지급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과업지시서를 시정할 것

(3)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및 판매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시험원의 배터리 시험인증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터리 등의 시험인증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적발시스템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 R&D사업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에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활용되도록 국가기술은행 등록비율을 높일 것

- 완성도 있는 기술 유입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이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단계 선정단계부터 사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R&D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기에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5) 미래부의 수요발굴지원단과 진흥원의 기술나눔 제도의 중복 문제를 검토할 것

(6) 기술은행 등록 관련

- 공공기관의 기술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 중 비공개되고 있는 기술이 모두 열람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활용기술도 등록해서 기술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8) 매출 기여도 등의 성과 부풀리기를 시정할 것

(9)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사업화 노력을 기울이고, 산업기술 ODA 협력을 확대할 것

(10) 해외의 R&D 기술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 협력 대상국 증가에도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 확장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11)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성과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 R&D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성과활용관리를 할 것

-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등 지역기술 거점 기관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 특성과 산업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을 할 것

(12)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할 것

(1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시군구 지역 영세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희망이음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사업비 유용을 막기 위해 R&D 수행기관 선정 시 기업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사 및 적발을 위한 자체적발 시스템 강화, 3회 이상의 부정사용의 경우 국가R&D과제 참여 제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 연구비 환수금의 환수율 제고를 위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등 환수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현재 1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R&D과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 검증 기준을 낮출 것

(5)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것

(6) R&D사업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정부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과제 기획 시 산업계 수요, 기술트렌드 등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국가 R&D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RCMS 사용자 증가에 따라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추진할 것

(10) 용역업체와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시정할 것

(11) 중대형 2차전지사업과 2010년부터 진행된 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의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할 것

(12) 산기평의 이전계획에 따른 대구상주 인력(200명)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13) 시스템반도체 R&D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과제 기획 시, 조선해운업 및 지진 관련 과제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6. 한국디자인진흥원

(1) 코리아디자인센터 및 미래디자인융합센터의 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과업지시서를 시정할 것

(2) 굿디자인(GD) 마크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3) 디자인권의 등록출원 전에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경쟁업체에 모방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디자인진흥원의 홍보비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의 단순한 대회 및 전람회 개최 등의 소극적인 홍보 대신 디자인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5) 디자인기업 등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7. 한국세라믹기술원

(1) 비정규직 운영 관련

-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시정할 것
-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할 것

(2) 용역계약 관련 불공정 조항을 시정할 것

(3) 향후 간부진 구성 시 지역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을 검토할 것

(5) 연구부정행위 관련

-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소속 연구원이 자신의 딸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부정행위가 고3 딸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는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

28. 한국전력기술

(1) 청렴도 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3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파견업무 용역서비스 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

(3)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민·관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 한국가스기술공사

(1) 공사는 경정비 공사를 특정 5개 업체가 과점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계약 입찰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기존 과점 업체들이 담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 전 이건영 감사의 선거출마기간 중 불합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이므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임금을 반환하거나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3) 현 상임·비상임 이사의 가스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것

(4)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는 지급하고 있으나, 상여금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30. 한전KDN

(1)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

31. 한전KPS

(1)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임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2)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출 것

(3) 한전 KPS 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근절할 것

(4)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것

(5)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을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2. 한전원자력연료

(1) 방사성폐기물저장고 등 주요 시설의 내진등급이 2등급에 불과하므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33. 기초전력연구원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에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할 것

34. 강원랜드

(1) 불법 대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2) 강원랜드가 카지노에 컨벤션센터, 전시회, 박람회, 레저관광산업 등을 융합하여 MICE 산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 전자테이블이 게임 횟수나 베팅금액 등을 기록하여 도박중독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금 투입 방식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자테이블 도입을 재검토할 것

(4) 외주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과 강원랜드 정규직간의 차별 대우를 완화할 것

(5) 워터파크 설계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 소요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강원랜드 리조트시설 이용포인트(콤프)의 개인별 하루 사용액 상한, 가맹점별 월 판매한도 상한을 완화할 것

(7) 향후 슬롯머신 운영·보수 관련 기술 개발 등 자체기술 개발방안을 마련할 것

(8) 강원랜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9)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규제를 준수할 것

(10)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카지노 입장료를 인상할 것

(11) KL중독관리센터 관련

① KL중독관리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강원랜드의 전체 순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② 상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담전문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③ KL중독관리센터를 강원랜드 산하기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변경할 것

(12)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를 상향조정 하는 등 도박중독 관리를 강화할 것

(13)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14)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강원랜드가 당기 순이익의 1%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것

35.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 일본기술자초청 국내기업애로기술 사업관련 지방기업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노력을 강화할 것

36. 전략물자관리원

(1) 전략물자 불법수출 발생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예산 확대 및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법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보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 국민 설문조사 결과 원전을 줄이자는 응답이 늘어난 것은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게 홍보활동을 수행할 것

3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 자격이 없고 국가 수혜금을 받는 민간 업체 사장이 공공기관의 의사회 의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장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것

(2) 특별채용과 채용인원을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인사채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4) 비정규직 차별 및 청사 시설관리 용역계약 간 불공정 조항을 시정할 것

(5) 해외 로봇기업의 국내 진출 및 M&A로부터 국내 로봇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6) 이사회 소속 업체에 과제가 지원된 문제를 시정하여, 이사회 소속 업체가 지원 과제 참여 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

(8)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위상을 격상해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을 의장으로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할 것

(9) 로봇산업 실태조사 시 SI(시스템통합) 업체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10) 서비스용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수요창출, 로봇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로봇산업 글로벌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11)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사업 실적 및 제조지원 장비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0. 중소기업진흥공단

(1) 창업자금지원 시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

(2)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개입, 불법 컨설팅 방지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것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방송의 법인화 추진 및 콘텐츠 개발을 내실화할 것

4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통해 R&D 자금 환수율을 높일 것

43.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1) 전문엔젤 풀을 확대하고 창업 경험이 있는 전문 엔젤이 대폭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44. 중소기업유통센터

(1)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제품 매출비중 확대방안 마련할 것

(2) 공영홈쇼핑 판매대행 수수료(3%) 개선책을 마련할 것

4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 전임 특허청장에 대한 출입카드 발급, 사무실 제공, 특혜 수당 지급 등 비합리적인 전관예우를 시정할 것

(2) 정원 및 조직 확대, 원장 선임 등 기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서면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 부실 운영을 시정할 것

Ⅶ. 특기사항

□ 위원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현황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 명
정운천 위원	3	◦농민주도형 태양광발전 모델(농가발전소) 추진 계획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탄소산업 ◦새만금개발의 도전과 과제
정유섭 위원	1	◦우리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권칠승 위원	1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생이먼저입니다> 2016년 국정감사 21일의 기록
김경수 위원	9	◦국가 R&D 사업 현황과 과제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정책 분석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 ◦분산형 전원 정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창업지원사업 통합 현황 및 검토과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현황 및 법제화 방향 ◦특허선행기술조사기관의 등록제 추진방향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쟁점과 과제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박정 위원	2	◦미래 성장동력, 안전한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실태조사 백서
송기헌 위원	1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어기구 위원	6	◦정부의 국가전력 수요예측의 오류와 대안 ◦중소기업청 정책사업 추진 및 성과 지표 분석 ◦비상 발전기를 활용한 예비전력 확보방안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시설의 사회적 비용 ◦대안 전력정책의 가능성과 희망 ◦2016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우원식 위원	2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안전한 학교만들기-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
유동수 위원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특허 경쟁력 향상 방안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및 보복 사례
이찬열 위원	4	◦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지진대응 관련 개선과제방향에 대하여 ◦골목상권 위협하는 대기업 한식뷔페 진출의 문제점 ◦바람직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
이훈 위원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특허심판제도의 고찰
김수민 위원	4	◦전기요금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 ◦전력시장 민영화의 병폐 해법은 재공영화 ◦미래를 생각하는 중장기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 ◦청년창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황